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정책동향

VOL.01
2013. 02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3.1.1 ~ 1.31)

건축문화 부문

- 국토부,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독도 지리넷') 구축
-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작성 건축도면 해제집 발간
- 도시 전문가 100인이 본 미래 서울 키워드는 '문화'
- 지역 산업거점과 연구개발기반 정보를 한눈에- 대구시, 대구연구개발지도 제작 및 배부
- 옛 도청사 모형 조형물 신청사에 설치
- 단골고객 등산로 표기, '나만의 맞춤지도' 상반기 출시
- 전국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모여 지역문화정책 논의
- 국가기록원, 1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 도로 개통, 건물 준공 즉시 새 지도에 표기
- 네이버 지도를 통해 전통시장 거리뷰 서비스 시작
- 국가공간정보 이렇게 많아요
- 스마트폰에서도 경기도 내 모든 SNS를 만날 수 있다

녹색 건축·도시 부문

- 전북 탄소밸리사업 국가예산 안정적 확보로 사업추진 청신호
-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총 200억 지원 나서
- '물순환 생태도시 부산' 위한 -부산시, 환경녹지정책 대전환 시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One-Stop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U-City 시범도시' 선정
- 2012년 소규모 빔물 이용시설 시범 사업 완료
- 전국 생태자연도 일부 개정고시
- 저탄소녹색성장 산림사업 1,184억 원 투자
- '친환경건축' 과 '주택성능등급' , '녹색건축 인증' 하나로!
- 생태계 보고인 민북지역 산림자원을 체계적 보전·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종합 계획 수립 추진
- 미래 도시가치를 생각하는 녹화시책' 강력 추진
-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5,000억원 지원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전국 최초 마을별 복합결집지수(BIMD) 활용 - 부산시,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수립 완료
- 100년만의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 본격화
- 대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 제2기 도시재생 원년을 맞아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 부산시, 마을만들기 컨트롤 타워 본격 가동!
-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 사업 탄력
- 2013년도 간척지 이용 체계적으로 개편
- 농어촌 발전을 도모할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확대 추진
-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 모색
-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간 공동협력사업 본격 착수
- 녹색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 최우선 과제 '도시경쟁력 제고'



Contents

건축도시분야	이달의 정책 Highlights	5
정책 UPDATES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6
	건축문화 부문	8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 '독도 지리넷' 구축	8
	단골고객 · 등산로 표기, '나만의 맞춤지도' 상반기 출시	8
	도시 전문가 100인이 본 미래 서울 키워드는 '문화'	8
	전국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모여 지역문화정책 논의	9
	서울시, 각종 공간정보 지도에 쉽게 담아 스마트폰으로	10
	충남 서천 복합문화시설, 공공건축 대통령상 수상	10
	옛 도청사 모형 조형물 신청사에 설치	11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작성 건축도면 해제집 발간	11
	국가기록원, 1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12
	도로 개통 · 건물 준공 즉시 새 지도에 표기	13
	국가공간정보 이렇게 많아요	13
	'친환경 녹색도시-대구' 환경정책 총망라	14
	지역 산업거점과 연구개발기관 정보를 한눈에!	14
	강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인터넷 민원서비스 540만 건 처리	15
	충남발전연구원, '잘된 도시 디자인 둘러보기' 책 펴내	15
	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16
	인천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전통시장 거리뷰 서비스 시작	16
	스마트폰에서도 경기도 내 모든 SNS를 만날 수 있다	16
	KDI · OECD, 내달 5일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콘퍼런스	17
	문화, 세계와 함께 놀다 '2013, 세계문화교류포럼' 개최	17
	'국제문화소통포럼 2013' 1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려	18
	녹색건축·도시 부문	19
	전국 자전거길 종합안내 서비스 개시	19
	다섯(五) 하천(川) 따라 '오천자전거길' 100km 조성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
	'One-Stop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U-City 시범도시' 선정	20

‘친환경건축’ 과 ‘주택성능등급’ , 이제는 ‘녹색건축 인증’ 하나로!	21
‘우리의 첨단 공간정보기술로 북극지역 상세히 조명한다’	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22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5,000억 원 지원	23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총 200억 지원 나서	23
서울시, 실용성 높은 서울형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24
인천시, 공원·녹지의 생태적(生態的) 관리방법 도입	24
‘물순환 생태도시 부산’ 위한 부산시, 환경녹지정책 대전환 시행	25
유시티 프런티어! 부산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본격 추진	25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Smart 녹색교통 추진	26
지역의 생태관광정보를 한눈에 본다!	26
광주시, 광산31호 교통광장 생태광장으로 조성	27
광주시, ‘탄소중립도시 광주 2050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27
2012년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시범 사업 완료	28
‘미래 도시가치를 생각하는 녹화시책’ 강력 추진	28
울산 맞춤형 생태환경투어 전국에 알린다.	28
울산, ‘편리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U-City’ 로 도약	29
경기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녹색성장사업 발굴한다.	29
전국 생태자연도 일부 개정고시	30
강원도, 생태계 보고인 민북지역 산림자원 산지관리종합 계획 수립 추진	30
녹색자원을 통한 강원발전 도약	31
저탄소녹색성장 산림사업 1,184억 원 투자	31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본격 사업 착수	32
‘편리하고 스마트한 토지행정’ 다짐	32
임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공모 선정	32
전북 탄소밸리사업 국가예산 안정적 확보로 사업추진 청신호	33
섬진강 자전거길, 자연체험형 명품길로	33
경상남도,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 조성	34
충북도, 에너지절감형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 확대	34
전북도, 도심 생활권 녹지축 구축	35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36
100년 만의 지적재조사 (바른땅)사업 본격화	36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 모색	36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간 공동협력사업 본격 착수	37
2013년도 간척지 이용 체계적으로 개편	37
농어촌 발전을 도모할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확대 추진	38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날개 달아	38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새로운 유형 쏟아진다	39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발표	40
부산시,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수립 완료	41
부산시, 마을만들기 컨트론타워 본격 가동!	42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 21억 확보	42
인천시, 도시계획정보 인터넷 검색서비스 실시	42
인발연,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및 관리방안	43
대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43
대전시, 원도심 '희망의 끈 잇기 프로젝트' 추진	44
대전시, '오정재정비촉진지구' 첫 뉴타운 해제	44
광주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동력 확보	45
울산시, 귀어가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46
울산시, 동해안 자전거길 본격 조성	46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빨라진다	4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 사업 탄력	47
경기도, 독거노인 함께 살 공동생활주택 설치한다	47
경기도, 내 반환공여지 개발지원 확대 총력	48
경기도, 구도심, 융복합 도시마을로 재생된다	48
전남도, 휴양전원마을·은퇴도시 조성 가속 페달	49
경북도, 농촌마을 개발사업 시동	49
경북도, 녹색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49
신경주 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박차	50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속화	51
충청내륙 초광역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52
제주2013, 공공디자인 무대를 펼친다	52
제주도, 최우선 과제 '도시경쟁력 제고'	53

이달의 정책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인 ‘독도 지리넷’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전자지도 ‘온맵(On-Map)’이 출시되어 나만의 맞춤형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월8일에는 충남 서천 복합문화시설이 제6회 공공건축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국가기록원에서 1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1950~70년대 겨울 생활상을 보여주고, 일제시기에 작성된 건축도면 해제집을 발간하여 조선총독부 청사의 당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해제집과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옛날 생활모습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근대 건축사 연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지도를 활용한 맞춤형 지도 제작으로 교육, 관광 등의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지도제작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전국 자전거길 종합안내 서비스’를 비롯하여 ‘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설’ 등 녹색 건축·도시에 관련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친환경건축’과 ‘주택성능등급’을 ‘녹색건축 인증’으로 통합 및 우리의 첨단공간정보기술로 북극지역의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및 One-stop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U-City 시범도시가 선정되었다.

각 지자체별로는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시범사업’, ‘녹색길 조성사업’, ‘생태광장 조성사업’ 등 자연채감형 사업이 주로 추진되었으며, 이밖에 다양한 녹화시책을 비롯하여 침

단기술을 활용한 기반확충사업도 본격화 되었다.

법제 개편을 비롯해 새롭게 추진되는 녹색 건축·도시 관련 정책 사업으로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국제적 인지도 강화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북극지역의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남·북극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등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이번 달 국토환경디자인부문 추진정책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을 입체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과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을 모색하는 방안 마련 및 부처간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동협력사업이 추진 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3년도 간척지 이용에 관한 개편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할 총괄계획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로는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새로운 유형과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을 발표하는 등 도시재생과 재정비 사업에 관련한 정책들을 다수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 전반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특색 있는 마을개발 및 지속가능한 마을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의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2013년도 1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해당 주체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87건 중 중앙부처는 23건 (26.4%), 지방자치단체는 64건(73.6%)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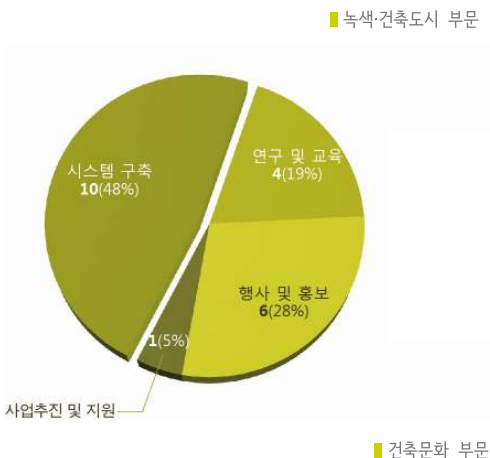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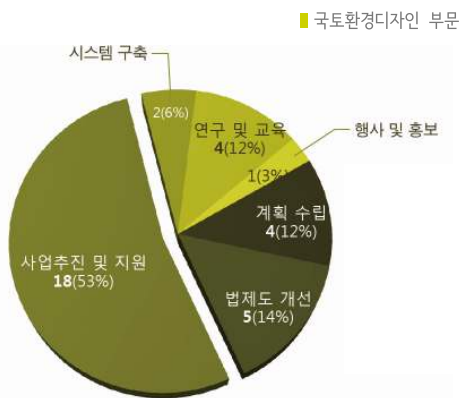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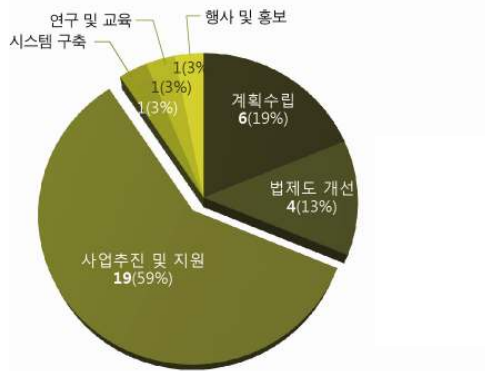
중앙부처는 총 23건의 정책보도 중에서 「녹색건축도시부문」과 「건축문화부문」에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각각 8건, 10건으로 중점 발표 하였으며, 가장 많은 시책 및 사업이 발표된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로 첨단미래도시 구축 사업, 인터넷·스마트폰 프로그램 구축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 12건을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64건의 정책 보도 중 「녹색건축도시부문」과 「국토환경디자인부문」에 관련하여 각각 26건, 27건을 중점 발표하였으며, 가장 많은 시책 및 사업을 발표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청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인터넷·스마트폰 프로그램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8건, 경기도청 7건이 발표되었다.

주관부처		건축 문화 부문	국토 환경 디자인 부문	녹색 건축 도시 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 부처	국토해양부	4 (4.6%)	3 (3.4%)	5 (5.7%)	12 (13.8%)
	기획재정부	1 (1.1%)	—	—	1 (1.1%)
	농림수산 식품부	—	2 (2.3%)	1 (1.1%)	3 (3.4%)
	문화재청	1 (1.1%)	—	—	1 (1.1%)
	문화관광부	2 (2.3%)	—	—	2 (2.3%)
	행정안전부	2 (2.3%)	—	2 (2.3%)	4 (4.6%)
합계 (중앙부처)		10 (11.5%)	5 (5.7%)	8 (9.2%)	23 (26.4%)
지방 자치 단체	강원도청	1 (1.1%)	—	3 (3.4%)	4 (4.6%)
	경기도청	1 (1.1%)	5 (5.7%)	1 (1.1%)	7 (8.0%)
	경남도청	—	—	1 (1.1%)	1 (1.1%)
	경북도청	1 (1.1%)	4 (4.6%)	—	5 (5.7%)
	광주광역시	—	1 (1.1%)	2 (2.3%)	3 (3.4%)
	대구광역시	2 (2.3%)	—	1 (1.1%)	3 (3.4%)
	대전광역시	—	3 (3.4%)	—	3 (3.4%)
	부산광역시	—	2(2.3%)	3 (3.4%)	5 (5.7%)
	서울특별시	3 (3.4%)	3 (3.4%)	2 (2.2%)	8 (9.2%)
	울산광역시	—	2 (2.3%)	4 (4.6%)	6 (6.9%)
	인천광역시	1 (1.1%)	3 (3.4%)	1 (1.1%)	5 (5.7%)
	전남도청	—	1 (1.1%)	1 (1.1%)	2 (2.3%)
	전북도청	—	—	3 (3.4%)	3 (3.4%)
	제주도청	—	2 (2.3%)	—	2 (2.3%)
	충남도청	2 (2.3%)	—	1	3 (3.4%)
충북도청	—	1 (1.1%)	3 (3.4%)	4 (4.6%)	
합계 (지방자치단체)		11 (12.6%)	27 (31%)	26 (30%)	64 (73.6%)
총 계		21 (24.1%)	32 (36.8%)	34 (39%)	87 (100%)

■ 각 부문별 관련기관

각 부문에 대하여 세부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은 전체 32건 중 ‘100년만의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 간 공동협력사업 착수’,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추진’ 등 과 같은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19건(21.8%)의 정책과제가 발표되었으며,



「녹색건축도시부문」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34건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및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200억 지원’, ‘에너지절감형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과 같은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18(20.7)건의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건축문화부문」은 전체 21건 중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독도 지리넷)구축사업’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각종 공간정보 맵 서비스 구축’ 등 과 같은 ‘시스템 구축’ 분야 10(8.7%)건의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6 (6.9%)	4 (4.6%)	10 (8.7%)
법·제도 개선	—	4 (4.6%)	5 (5.7%)	9 (10.3%)
사업추진 및 지원	1 (1.1%)	19 (21.8%)	18 (20.7%)	38 (43.7%)
시스템 구축	10 (8.7%)	1 (1.1%)	2 (2.3%)	13 (14.9%)
연구 및 교육	4 (4.6%)	1 (1.1%)	4 (4.6%)	9 (10.3%)
행사 및 홍보	6 (6.9%)	1 (1.1%)	1 (1.1%)	8 (9.2%)
총 합계	21 (24.1%)	32 (36.8%)	34 (39.1%)	87 (100%)

■ 부문별 관련 세부분야

전반적으로 1월 보도된 정책과제 87건 중 38건(43.7%)이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스템 구축’ 13(14.9%), ‘계획수립’ 10(8.7%)건, ‘법·제도 개선’, ‘연구 및 교육’ 분야 가 각각 9(10.3%)건, ‘행사 및 홍보’ 분야의 정책과제 8(9.2%)건으로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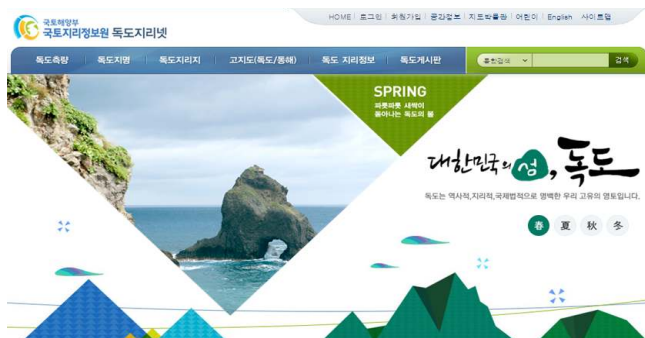
「녹색건축부문」의 ‘사업추진 및 지원’ 과 관련한 정책사업이 주를 이루어 활발한 진행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국토환경디자인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과 「건축문화부문」의 ‘계획수립’ 및 ‘법·제도 개선’ 과 관련한 정책과제에도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건축문화 부문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 '독도 지리넷' 구축

독도의 측량, 지도, 지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지리정보 사이트

‘독도 지리넷’은 우리 정부가 구축한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였으며, 1월3일에 오픈한 사이트에는 광복 이후 독도 측량의 역사와 그동안 제작된 수치지형도 및 제정·고시된 독도의 지명, 동서양 고지도 등의 방대한 지리정보가 수록되어있다. (‘독도 지리넷’ 공식사이트 : <http://dokdo.ngii.go.kr>)



■ 국토지리정보원 '독도 지리넷' 공식 홈페이지

2013.01.03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나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온맵(On-Map)’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편집기능으로 맞춤형 지도 제작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단골고객이나 등산로 표기 등 국민편의 생활지원에 까지 널리 이용될 것으로 또한, 국토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영상이 중첩되어 나타나며, 더불어 교육, 관광 등의 기초자료서 널리 이용될 수 있으며, 민간인들이 지도 제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온맵’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온맵을 국가기본도(1/5,000)로 확대하고, 지도 도식에 맞는 심벌과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형 등을 추가할 수 있는 보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자 한다.

2013.01.16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도시 전문가 100인이 본 미래 서울 키워드는 ‘문화’

서울연구원, 『도시 전문가 100인이 본 서울의 미래 키워드』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작년 12월 학계, 연구계, 공무원 등 도시 전문가 100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로 『도시 전문가 100인이 본 서울의 미래 키워드』를 1월 7일(월)발표했다.

설문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미래’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

단골고객·등산로 표기, ‘나만의 맞춤지도’ 상반기 출시

온맵(On-Map), 전문지식 없어도 필요에 따라 손쉽게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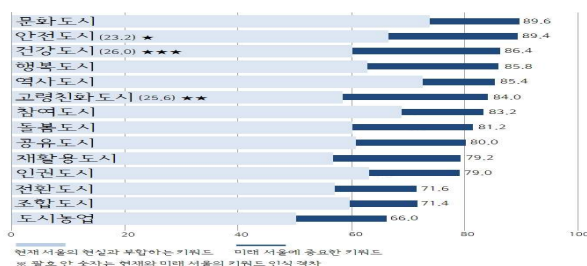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온맵(On-Map)’은 PDF 형식의 전자 지도로서 전문지식이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PC로 독창적인

는 과정에서 연구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토의를 통해서 사전에 선정된 ‘문화도시, 역사도시, 참여도시, 안전도시, 인권도시, 행복도시, 공유도시, 건강도시, 돌봄도시, 조합도시, 고령친화도시, 전환도시, 재활용도시, 도시농업’ 등 14개 키워드를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도시전문가 100인은 2012년 현재 서울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문화도시 > 역사도시 > 참여도시 순으로 꼽았다. 2012년 현재 서울의 현실과 부합하는 키워드는 문화도시(73.8점), 역사도시(72.4점), 참여도시(69점), 안전도시(66.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년 후 미래 서울에 중요한 키워드로는 문화도시 > 안전도시 > 건강도시 순으로 택했다. 20년 후 미래 서울에 중요한 키워드는 문화도시(89.6점), 안전도시(89.4점), 건강도시(86.4점), 행복도시(85.8점), 역사도시(85.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에 가장 부합하는 키워드이자 미래 서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문화도시’가 선정되어, 문화를 서울의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제시된 키워드 이외에 미래 서울에 중요한 개념으로 세계도시, 개방도시, 창조도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과 국제적 소통이 미래에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현재 수준과 미래의 중요도간 차이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건강도시(26점), 고령친화도시(25.6점), 안전도시(23.2점), 행복도시(22.8점), 재활용도시(22.4점), 돌봄도시(21.2점)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증가와 고령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 행복 증진이 보다 중요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전문가 100인이 본 서울의 현재와 미래 키워드

서울연구원은 이번 설문에서 제시된 각 키워드가 미래 서울에 갖는 의의와 정책방향을 2013년 발간될 『서울의 미래』 단행본 시리즈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2013.01.1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전국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모여 지역문화정책 논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확보방안

"생활문화 증진", "지역특화 문화예술도시", "지역문화예술지원 확대" 등 지역문화진흥은 21세기 문화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달리 이를 추진할 지역의 문화재단들은 오히려 지방재정의 위기로 인해 안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방법으로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 문화재단은 18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확보 방안"을 주제로 시도문화재단과 국회, 정부, 지자체 담당자, 민간전문가가 모여 새 정부에서 마련해야 할 지역문화정책의 법제도적 과제와 지역의 자구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한다. 1부에서는 "안정적인 지역문화진흥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과 2부에서는 "제휴·협력을 통한 자원과 재원의 다변화 확충방안"을 제안(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의회, 서울교육청, 한국메세나협회의 관계자, 민간회계법인 대표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실적인 정책 실현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와 담당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하여 법제도 등 외부 현황과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 플로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에서는 본 세미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새 정부와 국회에 문화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은 향후 '사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는 지역문화 진흥 세부과제 연구 등 지역과 국가의 문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13.01.17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각종 공간정보 지도에 쉽게 담아 스마트폰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공간정보 플랫폼을 스마트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서울시는 스마트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한 공간정보 플랫폼을 거치면 엑셀로 된 행정정보가 공간정보로 바로 자동 변환되고, 서울시 각 부서 및 자치구는 이 기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작은 도서관 등 각종 보유 정보를 Android, iOS 앱서비스로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앱은 서울시의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서울맵' 앱 중 하나의 메뉴 아이콘으로 구현되거나 혹은 다른 독자적인 앱으로 개발될 수 있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간 정보를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지도로 변환이 가능하다. 특히 민간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울시가 가진 차별화된 정보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면,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시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 번체) 총 5개 언어로 지원하는 다국어 일반지도와 다국어 항공사진지도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오픈 API도 구축해 관광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01.23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충남 서천 복합문화시설, 공공건축 대통령상 수상

국토부에서 2013년 1월8일 제6회 공공건축상 시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발주자의 역할과 노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좋은 건축을 유도하여 국토·도시간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올해 1월8일에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 또는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일로부터 5년내 준공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해양부 장관상 3점, 관련 학회장상 3점, 총 8개의 공공건축을 선정하여 수상하였다.

충남 서천군의 복합문화시설인 「봄의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건축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가압시설」을 적극 활용한 「윤동주 문학관」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전남 보성군의 「보성군 청사」, SH공사의 「영등포 쪽방촌 임시거주시설」, 경북 영주시의 「주민생활문화복지지원센터」가 각각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SH공사 '영등포쪽방촌 임시거주시설'



■ 전남 보성군 '보성군 청사'



■ 서울 종로구 '윤동주 문학관'



■ 충남 서천군 '봄의 마을'

2013.01.07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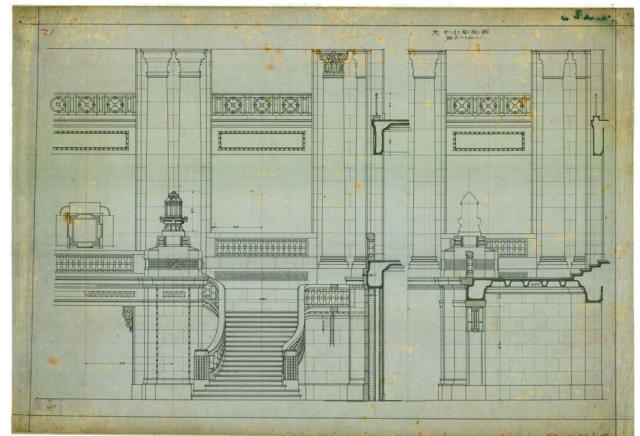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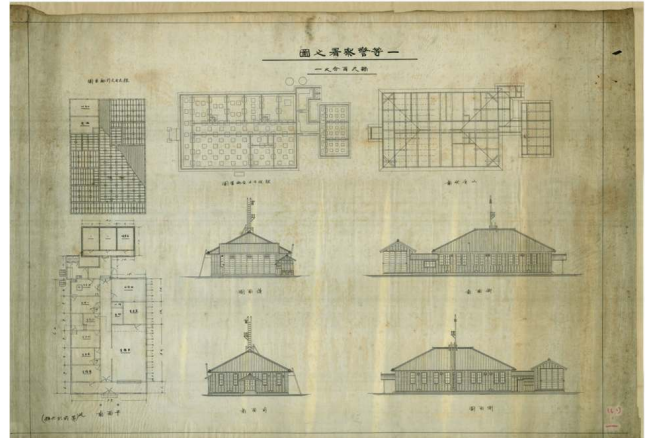
옛 도청사 모형 조형물 신청사에 설치

안희정 지사, 염홍철 시장 예방 받고 '내포 출범' 기념선물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5일 염홍철 대전시장의 예방을 받고, 옛 충남도청사 모형 조형물을 전달 받았다. 모형 조형물은 가로, 세로 1.5m, 높이 1m 규모로, 신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됐다.

그동안 양 시·도는 공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옛 도청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도청의 대전 역사 마감과 내포 시대 출범을 기념하는 선물을 전달하게 된 것을 뜻 깊은 자리였다. 충남의 더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152만 대전시민의 마음이 담긴 옛 도청사 모형 조형물은 이제 대전을 떠나 도민 품으로 돌아왔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시·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3.01.15
충남도청 총무과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작성 건축도면 해제집 발간

조선총독부 청사 상세도가 다수 포함



<위에서 부터>

■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집6 표지

■ 일등(一等) 경찰서 설계도, 1910~12년 추정

■ 조선총독부 중앙홀 복면도, 1922년 추정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청사와 치안시설, 전매시설 등의 건축도면과 설명이 수록되어있는 「일제시기 건축도면6」은 근대 건축사 연구를 활성화하고, 일제 식민통치 실상을 밝히는데 이바지하고자 발간되었으며, 조선총독부 청사의 세부 구조 및 입·단면 상세도는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청사 신축 당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청사 본관 이외에도 신축 당시의 기관실 등 부속건물과 추가로 지어진 별관들의 도면이 공개되어 청사의 전모와 한편, 일제강점 초기 식민통치의 핵심인 치안체계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구

축하고자 했던 경찰서의 표준화된 도면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광화문 앞 조선시대 육조거리에 입지했던 경찰관 강습소, 경기도순사 교습소, 경찰참고관(警察參考館)과 조선시대 어의궁(현 서울지방 경찰청)자리에 들어선 피복창고 등 치안지원시설 도면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에 따른 근대도시로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해제집은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학계 등에 배포되며,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도 함께 실시 할 예정이다.

2013.01.0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국가기록원, 1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기록 속 동장군(冬將軍)

대한(大寒)을 맞아 소개된 1월달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1950~70년대 겨울 생활상을 보여주는 동영상 11건, 사진 9건, 일반문서 1건 등 총 21건의 기록물이 서비스된다.

「기록 속 동장군」을 주제로 소개되는 1월의 기록물은 한강과 인천항을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겨울 생활 풍경을 담고 있다.

동장군의 위력 관련 기록에서는 한강을 빙상대회장으로 변하게 하고, 소달구지를 올려 얼음을 채빙할 정도로 두껍게 얼어붙게 한 1950년대 중반의 강추위를 볼 수 있으며, 동장군 속 생활상 관련 기록에서는 폭설로 고립된 산골마을에 구호식량과 의약품을 나르고 지붕 높이만큼 쌓인 눈을 치우며 길을 여는 광경, 쫘쫘 얼어붙은 한강에서 스케이트와 썰매를 타는 까까머리 아이들과 얼음을 뚫고 잉어낚시에 여념이 없는 강태공 할아버지 등 1950년대의 모습을 담았다.



■ 얼어붙은 인천항(1963)

■ 천연 빙상대회장이 된 한강(1956)

■ 한강 얼음을 잘라 끌어올리는 모습(1957)

2013.01.19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도로 개통·건물 준공 즉시 새 지도에 표기

국가기본도 선진화 계획...상시 업데이트·데이터융합 서비스

앞으로 개통된 도로나 준공된 건물이 지도에 늦게 표기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진다. 스마트폰 등 빠르게 변하는 이용환경을 반영해 전자지도가 늘어나고, 필요한 데이터를 융합해 사용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의 수정주기 단축, 신규 전자지도 제작 및 기술 고도화,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과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본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기본도 :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로서 국토 전역에 걸쳐 통일된 축척과 정확도로 제작된 지도, 우리나라는 1/5,000지도

최근 급속한 IT기술발전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도를 활용하고, 빠르게 변하는 국토 변화정보를 알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국가기본도 선진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2년 주기 수정체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변화가 많은 주요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한 연내 상시수정체제로 개선된다.

기존 현장조사 방법을 보강하여 건설 준공도면 활용,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무인항공기, 모바일매핑시스템 등의 신기술 적용을 통해 신속하게 지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는 어제 공사가 끝난 도로와 건물을 오늘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획득하여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종이지도 제작을 축소하고 영상과 지도가 중첩된 새로운 형식(PDF)의 전자지도(온맵, On-Map)를 제작 할 예정이며, 지도편집 자동화, 데이터 유통·활용 모델 등의 기술을 R&D 사업과 함께 개발하여 지도 제작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 나갈 것이다.

온맵(On-Map) :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개념 전자지도의 명칭으로 전문 S/W나 기술 없이도 사용자 편집이 가능한 지도

해양, 항공, 실내, 지하공간 등 다양한 국토정보를 지도에 표현하고 시멘틱 지도검색, 사용자 참여형 지도, 1/25천 영문판 지도 등의 새로운 서비스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지명 홍보 및 다국어 지도 배포(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등의 활동으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올바른 국토 정보의 보급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국가기본도 선진화 계획」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기본도 제작을 목표로 매년 계획을 검토·보완하여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3.01.29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연구원 지리정보과

국가공간정보 이렇게 많아요

234개 기관 보유 국가공간정보 7만8천 건 한 곳서 확인 가능

국토해양부는 2012년 말 현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를 전수 조사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총 234개 기관이 보유한 도로, 건물, 연속지적, 행정구역, 항공사진, 새주소 등의 기본공간정보와 식생도·임상도·생태자연도·정밀토양도와 같은 주제정보, 주주소, 시장, 병원, 경로당, 관공서 등의 위치정보 등 총 56종 78,707건으로 전년 72,323건 대비 8.1%가 증가하였다.

IT와 모바일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정보산업은 무한한 가치창출이 가능한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에서 국가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하여 첨단 IT와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를 전수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공간정보 목록의 공개를 통해 수요자는 필요한 정보가 이미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공간정보구축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속성정보를 정의한 메타데이터를 국제표준에 맞게 작성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각 기관별로 상이한 공간정보 공개기준 및 가격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공간정보를 빈곤, 환경, 재난, 교통 등의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핵심자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2013.01.31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과

「친환경 녹색도시-대구」환경정책 총망라

대구시, 2012 환경백서 발간

대구시는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시책추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현황 및 분야별 환경시책, 추진상황 등을 정리 수록한 「2012 환경백서」를 발간해 배부한다. 환경백서는 대구시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 향상과 함께 환경 분야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2012환경백서에는 지난해 추진한 환경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이 종합 정리돼 있으며, 제1부 일반현황,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 제3부 환경보전기반조성, 부록 등 총 470여 쪽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자연적 사회적 여건과 환경행정의 조직, 예산 등 일반현황이 수록됐다. 제2부에는 지구환경보전, 환경산업 기반조성, 대기·수질 환경보전, 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정책을 각 분야별로 설명하고 있다. 제3부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 환경피해 구제제도 등이 수록됐다.

대구시는 환경백서를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해 시민들이 원하는 환경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백서는 시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환경보전 실천 활동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2013.01.03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지역 산업거점과 연구개발기관 정보를 한눈에!

대구시, 대구연구개발지도 제작 및 배부

대구시는 지역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최근 지역에 유치한 연구개발특구 등 성장거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연구소의 위치 정보와 연구개발 분야를 총 정리한 대구연구개발지도를 제작·배부한다.

대구시 연구개발지도에는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등 지역산업의 거점정보와 지역소재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 및 정부에 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안내정보를 담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지도를 제작·배부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소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알고 나면 쉬운 연구개발사업 길라잡이’ I(사업준비편), II(사업수행편) 각각 1만 권을 발간해 지역 기업들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이해하고 정부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지도는 그 후속작으로 시 산하 경제 관련 부서와 지역 중소기업에 3천 부를 배포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등 지역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에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 성장을 위해 이번에 발간한 대구연구개발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3.01.14
대구광역시 신성장정책과

강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인터넷 민원서비스 540만건 처리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및 개별 토지·주택 가격정보를 실시간 인터넷서비스

강원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및 개별 토지·주택 가격정보를 실시간 인터넷서비스하고 있으며, 12년 한해 540만건 이상의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처리했다. 강원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서류 열람·발급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개발업등록 등 부동산관련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종목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건 12년 7월 인터넷 발급을 전면 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전제 82.8%인 440만건이며, 뒤를 이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13.6%인 73만건으로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토지정보 인터넷서비스는 KLIS 홈페이지(<http://klis.gwd.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강원도홈페이지(<http://provin.gangwon.kr>)로 접속해 메인화면의 “토지정보”를 클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강원도는 올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서버 등 전산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할 계획으로 신규장비가 도입되면 도민에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토지정보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품격의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를 위해 연속지적도와 위성영상을 제공하는 토지관련 공간정보 서비스(<http://map.gwd.go.kr>)를 시범운영을 거쳐 2월말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2013.01.10
강원도청 토지자원과

충남발전연구원, 「잘된 도시 디자인 둘러보기」 책 퍼내

도시 디자인은 도시가 지닌 가치를 정립하고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역할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이충훈 박사는 2008년부터 5년간 유럽과 일본의 여러 도시를 직접 돌아보며 얻은 생생한 자료와 사진을 “잘된 도시 디자인 둘러보기”라는 책에 담았다. 이 책은 ‘도시의 얼굴이 경쟁력’이라는 전제하에 ‘도시 디자인’과 ‘도시 마케팅’, 그리고 ‘도시 브랜드’ 구축과의 연계성을 각 도시별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충훈 박사는 “도시 브랜드를 나타내는 슬로건인 ‘아이 러브 뉴욕(I♥NY)’, ‘예스 도쿄(Yes Tokyo)’ 등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통해 수많은 관광객과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도시 디자인은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 마케팅 전략임을 인식하고 도시민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도시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도시 공공디자인정책 방향 설정과 잘된 도시디자인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3.01.08
충남도청 충남발전연구원

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1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사례발표’ 교육

경상북도는 24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시·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사례발표’ 교육을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토를 일필지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하·지표·지상을 조사 측량해 GPS위치로 디지털화해 등록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19년간 전 국토를 조사하게 되며, 경북도의 사업량은 전 국토의 19%에 해당하는 1만9천28km², 559만필지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영천, 상주 등 5개 시·군, 5개 지구 213만3천m², 1천774필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사업의 추진방향과 지적재조사 특별법 이해, 지난해 시범사업지구인 상주시와 군위군의 사례발표와 문제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시·군 담당자들은 “100년 만에 우리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펼치는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청과 시·군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구성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시대 아날로그 종이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실시간 토지행정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2013.01.24
경북도청 토지정보과

인천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전통시장 거리뷰 서비스 시작

‘인천Map 콘텐츠 공동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

인천시와 네이버는 2010년 8월 ‘인천Map 콘텐츠 공동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도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하게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11월 21일부터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전통시장 53곳에 대한 6,163노드(약48GByte)의 전방위 입체 파노라마 영상 촬영을 완료하고 이달 초 네이버에 전달되었으며 30일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네이비지도 거리뷰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네이비지도를 통해 인천시내 53곳 전통시장의 정감 있는 밀착사진을 서비스하여 시민들이 시장 내부는 물론 주차장과 주변 편의시설을 인터넷에서 둘러보고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 전통시장 내 11,000여 점포에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전통시장에 활기차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가 넘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네이버는 지난 2010년 업무협약 체결 후 항공사진과 입체 파노라마 영상 등 다양한 지도 정보의 공동 구축과 활용으로 서로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익 재산과 민간 서비스 인프라의 협력 분야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료 공동 활용을 뛰어 넘어 다양한 콘텐츠 공동 개발 등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1.29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스마트폰에서도 경기도 내 모든 SNS를 만날 수 있다

경기도 소셜허브 2차 개편 실시

경기도 SNS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도 소셜허브’를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경기도 소셜허브를 볼 수 있는 모바일버전과 미투데이를 추가한 2차 개편을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경기도 소셜허브'로 검색하면 모바일 버전 경기도 소셜허브(<http://m.sns.gg.go.kr>)에 접속할 수 있어 경기도와 공공기관, 도내 31개 시·군, 유관기관이 운영 중인 SNS와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만 있던 기존 소셜허브 서비스에 국내 SNS인 미투데이를 추가해 젊은 이용자 폭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경기도 소셜허브에 등록된 도내 SNS는 기존 280개에서 미투데이와 기타 미등록 서비스를 합쳐 총 293개로 늘게 됐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셜허브를 구축한 경기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으며, 소셜허브 2차 개편에 더해 올해에는 경기도 소셜허브에 등록된 도·시·군·공공기관 SNS 운영자와의 워크숍, 공무원 SNS 활용역량 강화교육 등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기도 소셜허브'는 경기도와 공공기관, 31개 시·군, 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7월 문을 열었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던 경기도 소셜허브를 단독 도메인(<http://sns.gg.go.kr>)으로 독립시키는 등 1차 개편을 2012년 1월에 단행한 바 있다.

2013.01.31
경기도청 뉴미디어담당관 소셜미디어팀

KDI · OECD, 내달 5일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콘퍼런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다음 달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는 두 기관이 진행한 '한국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분야별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노동시장 정책 과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 정책 방향 등 다섯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KDI 원장,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부국장,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2013.01.29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문화, 세계와 함께 놀다 '2013, 세계문화교류포럼' 개최

안석준 CJ E&M 대표, 닉 파웰 영국국립영화학교(NFTS) 총장 등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문가 참석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가톨릭대학교는 오는 1월 31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류, 창조적 활용을 통한 글로벌 대중문화로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3 세계문화교류포럼'을 개최한다.

'한류의 창조적 가치', '세계 문화전문가가 바라본 글로벌 대중문화의 성립조건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유관인사뿐 아니라 영국, 일본 등 해외 문화 전문가들도 참여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대중문화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제1세션의 제1주제 발표인 ‘2013년 케이 팝 트렌드와 한류 지형의 변화 전망’에서는 안석준 CJ E&M 음악 사업 부문 대표가 2012년 케이 팝을 6개의 키워드로 분석하고 2013년 케이 팝을 전망한다. 1주제 토론에는 이경희 YG엔터테인먼트 이사와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실장이 참여하여, 케이 팝의 미래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한류 자원의 창조적 활용 영역과 접근 방법’을 발표하고, 이태식 Kotra 지식서비스사업단장과 송성욱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와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나간다. 제2세션인 ‘세계 문화 전문가가 바라본 글로벌 대중문화의 성립 조건과 발전 방안’은 영국국립영화학교 닉 파웰 총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기조강연 후에는 글로벌 문화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의 사회는 아리랑 국제방송 손지에 사장이 맡고, 유튜브 재팬&코리아 존 히라이 음악부문 대표, 유니버설 뮤직재팬 다카시 기모토 부사장, 필리핀대학 매스커뮤니케이션과 플로린다 마테오 교수, 파리정치대학교 경제학과 파트리크 메슬랭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파트리크 메슬랭 교수는 유럽인들이 케이 팝에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케이 팝의 에너지 때문이라 말하며, 특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들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화부는 세계문화교류포럼이 대중문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 포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럼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정부의 문화 정책과 관련 산업의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3.01.30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국제문화소통포럼 2013’ 1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려

‘공존과 소통의 시대, 세계와 문화교류를 통한 발전을 묻다’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최한다. 이번 포럼은 모든 경계를 넘어 공존과 소통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문화 간의 대화와 교류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18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국제문화소통포럼 2013’을 개최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1부에서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공존과 소통을 위한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기조강연 후에는 ‘세계와 문화교류를 통한 발전, 그 과제’라는 주제로 대담이 이루어진다.

2부에서는 ‘국제 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교류 중심으로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주제에 대한 더욱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에 대해 정우탁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원장과 박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이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수석프로그램머, 문시연 숙명여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정재알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전략사업본부장, 송해진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인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고정민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발표하며, 맹완호 괴테 인스티튜트 독일문화협력관이 독일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학순 카톨릭대 디지털 미디어학부 교수, 홍기원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유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홍종열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국제문화소통포럼 2013’은 세계 곳곳에 있는 인류의 다양한 삶의 양식인 ‘문화’와 ‘문화적 표현’이 서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진흥하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방향과 구체적 방안들은 국제 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다.

2013.01.1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녹색건축·도시 부문

전국 자전거길 종합안내 서비스 개시

자전거 여행정보와 인터넷·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서비스

지난 2011년 10월 남한강 자전거길이 개통되었고, 이어서 2012년 4월에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자전거길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3년 1월4일, 자전거길에 대한 통합정보와 자전거길 주변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를 개설하게 되었다.



■ '자전거 행복나눔' 공식 홈페이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비롯한 10개의 지자체 명물길에 대한 지도정보, 접근경로, 주변시설 등 모두 12종 2400여 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목적지까지의 길 찾기와 과속위험, 추락·낙석·미끄럼 주의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과 위치정보를 통한 주변시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고 및 파손된 길 신고, SNS 공유, 여행경로 및 주파 기록관리를 비롯하여 빨간색 무인인증센터에 부착되어있는 자

전거 모양의 QR코드를 찍어서 '사이버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013.01.04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정보화지원과/정보화관리과

다섯(五) 하천(川) 따라 '오천자전거길' 100km 조성

남한강(수도권), 새재·금강(충청·호남권), 낙동강(영남권)이 연계되는 화합과 소통의 자전거길 7월까지 조성

충북 괴산에서 증평, 청원, 청주, 세종시를 지나 금강자전거길로 연결되는, 지방하천 다섯 개를 따라 달리는 '오천(五川)자전거길'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가 조성하는 오천자전거길은 총연장 100km*로, 새재자전거길과 금강자전거길을 연결하게 된다.

기 조성구간 27km (청주시~세종시) / 미 조성구간 73km (괴산군 45km, 증평군 8km, 청원군 15km, 청주시 5km)

올 7월 완공될 오천 자전거길로 남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자전거길을 잇는 국토종주자전거길의 허리인 새재자전거길과 금강자전거길(충청·호남권)이 연결되면 동서를 소통하는 전국적인 자전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이번 자전거길은 괴산~세종시의 전 구간이 5개의 지방하천(쌍천, 달천, 성황천, 보강천, 미호천)제방을 따라 조성되어 주변 경관이 아늑하고 수려하며 경사가 완만해 일반인이 주행하기 적합하다.



■ 오천자전거길 노선도

오천자전거길은 충청북도를 가로지르는 동서 소통의 자전거길로서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연결되어 금강을 따라 서해안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한 오천자전거길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2013.01.30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서비스(PSO) 비용부담 주체 해당부처로 이관 및 국가 위탁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

이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은 철도산업, 운송, 기술개발, 국제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으로 우리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외진출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측면의 편리한 철도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노약자 운임감면서비스(PSO)비용 부담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유공자의 운임 감면액은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한다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적자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신규 운영자의 진입을 허용

하되, 필요시 철도 대신 버스 등의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였고, 철도시설 사용체계 개편으로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 일부를 조달하여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투자비 상황이 가능하도록 선로사용계약을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였다.

그밖에 국내 철도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선로 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에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3.01.08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철도운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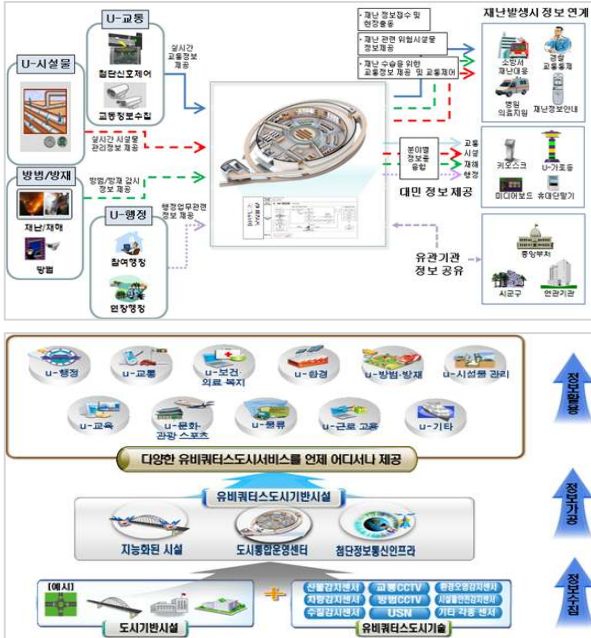
“One-Stop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U-City 시범도시” 선정

7개 지자체별 R&D 성과물 적용 서비스 모델 개발 예정

U-시범도시 사업은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 교통, 재난관리센터 등을 U-City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하여 One-stop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U-City 통합플랫폼 등을 시범적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2013년도 U-City시범도시로는 서울 은평구, 경기도 남양주시·화성시·부천시, 강원도 삼척시, 경상남도 양산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총 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U-Eco City R&D의 성과물을 적용하여 타 지역으로의 확산이 가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U-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방법·교통 센터 등 통합, 교량 안전, 시설물 관리, 의료, 환경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민 체감형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지자체로 확산·보급할 계획이다.



■ U-City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개념도

2013.01.08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능 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표시대상 공동주택 규모를 기존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취득기준을 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하여 녹색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등 특수지역의 인증기준을 남극 세종기지 등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상황에서 인증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수료 항목 중 심의위원회 심의비의 내역을 조정하여 심의위원 심사로 지급을 현행 기준 이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앞으로, 「녹색건축 인증제」의 국제적 인지도 강화를 위한 영문 명칭 공모를 통해 LEED와 BREEAM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인증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2013.01.15
국토해양부·환경부 녹색건축과·녹색협력과

‘우리의 첨단 공간정보기술로 북극지역 상세히 조명한다’

극지역 측량·지도제작 기본계획 확정... 빙하변화도·유빙정보 등 제공

공간정보 구축관련 주요 사업 내용	
1	국내외 남·북극지역의 지도제작 등 성과를 홍보 할 수 있는 극지역 지도집 (Atlas) 간행
2	1m급 이하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정보고기지 주변 지도 확대
3	해안선 및 빙하변화도 등을 제작
4	남극 해수면의 결정과 해수면의 변화량 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제공하기 위한 조위관측동 건설
5	GPS 위성기준점을 국제기구(IGS)에 등록
6	정밀 측지측량을 통한 극지역 공간정보 구축 인프라 확보

기간 연구용역 사업 내용	
1	북극해 주변 빙하변화도 등 지도 제작 방법
2	북극해 연안 국가 및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방안 모색
3	극지역 지도집에 포함될 콘텐츠 구성 및 기초자료 수집과 제도제작 시범사업

‘친환경건축’과 ‘주택성능등급’, 이제는 「녹색건축 인증」 하나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2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이 1월 16일부터 입법 예고되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기존 「친환경건축물」로 쓰이던 법령형식을 「녹색건축으로」 변경하고, 규정사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현행 규칙의 본칙 12개, 부칙 2개를 개정안에서 본칙 21개, 부칙 2개로 변경, 현행고시의 본칙 14개, 부칙 2개를 개정안에서 본칙 8개, 부칙 1개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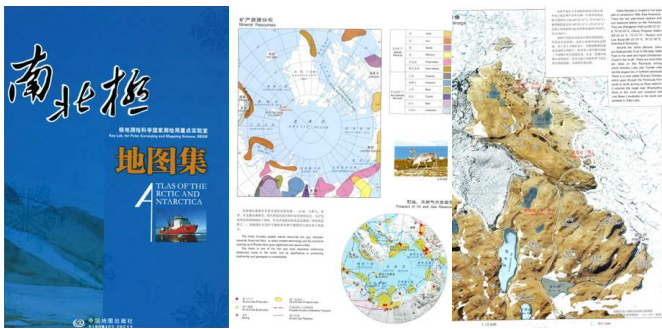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면서 북극해 연안 국가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은 북극해 지역의 막대한 천연자원 개발 가능성과 유럽과 아시아 간의 북극 실크로드 개설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중국, 일본 등에서는 북극권의 지하자원 개발 등 국익의 확보를 위하여 북극 지역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연구 활동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북극 지역 공간정보 구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극권 개발 등의 기초자료인 지도, 빙하변화도, 유빙 정보, 제공체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반연구를 올해 중에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부터 북극 지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장보고 기지를 포함한 남극대륙은 공간정보를 확대 구축하고 북극 지역은 새로운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북극 지역의 공간정보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남극지역의 제도제작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지명을 발굴하고 크게 남·북극 활동영역의 확보와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자 한다.



■ 남북극 지도집(Atlas)_중국 측회국 발행, 2009.12



■ 측지관측동 위치

2013.01.25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총 20억원 지원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성공모델 창출을 통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2.23일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위해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사업과, 리모델링을 구상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를 지원하는 설계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요소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그린리모델링을 민간건축물로 확산할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절차

2013.01.31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8,000동, 4,000억원에서 10,000동 5,0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국고80%, 지방비20%이던 주택개량자금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농어촌 정주의 욕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도시민 유치를 촉진시키고 농어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1.23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총 200억 지원 나서

시, 국내 최저 금리 지원, 지원액 상향 조정 및 지원 대상 확대 등 총 200억 지원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의 5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내 최저금리로 최대 20억까지 총 20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학, 병원, 24시간 패스트푸드점, 지하철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우선적으로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든 업종의 건물(편의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용자 지원범위 넓혀 최소금액을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하향조정하고 최대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소형건물부터 대형건물까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BRP의 용자지원 계획 공고문과 신청양식 등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에너지수요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효율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지원으로 대학,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5,000억 원 지원

전년대비 25% 증액, 농어촌주택 총 10,000동 개량 지원 계획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 또는 수리)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고령자 가정, 귀농 귀촌자 가정을 우선으로 하여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의 경우 2천5백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된다.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단일건물 (지하시설 포함)	최소 1천만원 최대 10억원	연리 2.0%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개선설치(절약시설 별첨)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3년 거치가능) - 단,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집합건물 (2개동 이상 소유)	사업금액의 80% 이내 최대 20억원		

2013.01.04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실용성 높은 서울형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 큰
녹색기술 중점 지원

서울시가 실용화,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등의 서울형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서울형 녹색기술 R&D 지원사업은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대기질 및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녹색기술 개발·활용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31개 R&D과제를 선정하여 총 6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실용형 녹색기술 집중 지원을 위해 2013년에는 6.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에너지 분야의 실용형 녹색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시의 역점시책인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전력난 등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에너지효율화 등 에너지 절감과 연관된 첨단 녹색 신기술을 우선 선정하여 집중 지원 할 예정이며, 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총 6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1년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13년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市 관련부서, 연구기

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시책 적용성과 시급성,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구지원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형 녹색기술 R&D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올해에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향상분야 실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3.01.18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인천시, 공원·녹지의 생태적(生態的) 관리방법 도입

공원·녹지 663개소(2,127천㎡)를 대상으로 생태계복원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생태적 관리방법을 도입

그 동안 공원·녹지를 주변여건 및 특성, 이용공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초 작업으로 동식물의 먹이 및 은신처 부족, 먹이사슬 단절 등 생태계(ecosystem)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수목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으로 토양 잔류 농약에 따른 환경오염 및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용객이 적고 생물 서식이 용이한 지역을(공원·녹지 경사면 부분, 다년생 초화 식재지역)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동·식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을 위한 풀베기 억제 및 농약사용을 최소화하며, 천연농약 사용 등 생물학적 방제로 관리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관리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도심에서 동식물의 종 다양성 확보 및 생태계(ecosystem)의 균형을 유지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생(共生)하는 환경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풀베기 및 농약사용 감소로 인한 약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3.01.28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물순환 생태도시 부산’ 위한 부산시, 환경녹지정책 대전환 시행

외형과 경관 중심에서 수체계의 연관성과 자연성을 중시하는 생태성
복원 정책으로 전환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부산시는 2013년을 ‘환경녹지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친화적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환경녹지정책 대전환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황폐해진 환경을 개선하고, 외형과 경관 중심의 도시하천 및 습지 조성으로 인한 수(水)체계 연계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도시 전역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자연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물순환 생태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 환경녹지국은 물순환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올해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서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정책방향 반영 여부를 심의 또는 자문한 후 사업추진에 나서게 된다. 원형 보전 및 원래의 모습을 살린 복원 등 생태학적 프로세스를 보전·보호하는 ‘자연생태기능 회복’ 생태복원사업 시 물순환체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물 순환체계 요소간의 연계성 검토’ 화단·녹지 등 수목식재지 빗물 활용 등 도시 녹지 내에 물을 수용·저장토록 하는 ‘물 재이용 및 관리기반 구축’의 3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녹지정책 대전환은 기존 외형과 경관 중심의 정책에서 수체계의 연관성과 자연성을 중시하는 생태성 복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에 시범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3.01.07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유시티 프런티어! 부산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본격 추진

부산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31개
U-서비스, 3개 전략공간계획 등의 내용 담아

부산시는 유비쿼터스시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청사진을 담은 ‘부산광역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국토해양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2005년 부산 유시티 마스터플랜을 국내 최초로 수립하여 유시티 프런티어로서의 입지를 굳혀온 부산시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창조적 소통으로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 시티 부산’을 비전으로 하여 경제, 생활, 문화, 환경의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최첨단의 ICT기술(정보통신기술)을 도시건설 기술에 접목하여 지능화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U-서비스를 담고 있다.

부산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31개의 U-서비스와 3대 전략공간을 설정하여 정보통신기술과 공간계획의 접목이라는 ‘유비쿼터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본연의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제시된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경제도시 전략에 스마트워크센터, U-재래시장 등 7개 서비스 스마트생활도시에 복지정보전달, 지능형주차 등 12개 서비스 스마트문화도시에 컨벤션, U-투어가이드 등 5개 서비스 스마트녹색도시에 U-파크, 카셰어링 등 7개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2013.01.09
부산광역시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Smart 녹색교통 추진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완료보고회 열려

부산시는 교통정보서비스센터와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의 교통정보를 연계해 실시간 광역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는 ‘부산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완료보고회를 1월 17일 오후 2시 30분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연산9동 소재)에서 교수, 부산발전연구원, 운송사업조합(준공영버스, 택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은 경찰청의 국비 74억원으로 경찰청의 위임을 받아 부산시에서 2011년 11월 착수하여 400여 일간의 사업공정을 마무리하고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택시와 시내버스에 장착하는 통합단말기인 네비게이션은 당해 차량의 운행정보를 노변기지국을 통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 보내지며 센터에서는 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다시 네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일반시민들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부산교통정보”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부산시내 주요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정체, 정체, 소통원활), CCTV영상 등을 출발전에 확인하고 정체구간을 피해 우회하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앞으로 부산시는 Smart 녹색교통 추진을 위하여 교통정보 수집이 취약한 신항만 배후도로, 도시고속도로, 시내도로 등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과 교통혼잡예고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으로 교통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3.01.16
부산광역시 교통운영과

지역의 생태관광정보를 한눈에 본다!

대구시, 새해부터 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설·운영

대구시는 “녹색환경도시 대구”의 우수한 환경·생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생태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해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홈페이지에는 대구의 습지, 야생동물, 대구의 산, 걷기코스, 자전거투어, 환경투어 등 대구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환경생태정보와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환경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환경녹지, 생태관광 정보 등 총 44종 메뉴, 71페이지에 달하는 유용한 정보가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간 제공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팔공산 올레길 8종, 팔공산·강정고령보·달성보 녹색길, 앞산자락길 등 15종의 다양한 고도 경관이 아름다운 「걷기코스」와 대구시 권역별 17종의 「자전거투어」는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블로그를 함께 운영해 소셜미디어 서비스(SNS)를 통한 정보제공은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연계로 시민과의 소통의 장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daegu.go.kr/ecoinfo/>이며, 대구광역시 및 환경 녹지국 홈페이지 링크,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주요포털 사이트에서 “대구시 생태”, “대구시 걷기”, “대구 자전거 코스” 등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대구시는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의 대중화에 따른 소통 미디어 활용에 발맞춰, 녹색환경 도시 대구 이미지에 맞는 자연 친화적 생태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콘텐츠 확대로 대구시 생태관광 정보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이다.

2013.01.02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광주시, 광산31호 교통광장 생태광장으로 조성

나대지로 방치된 31호 교통광장을 숲과 사람, 동물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태광장으로 조성

광주광역시시는 첨단지구 광산 ic 주변에 위치한 31호 교통광장을 자연과 가장 가까운 산림형태의 자연형 생태광장으로 조성한다. 생태광장은 community forest(도시와 여유롭게 소통하는 숲의 숲), eco forest(생태적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숲), scene forest(풍경이 아름답고 특색있는 숲) 3가지 숲을 가진 테마로 조성된다. 31호 교통광장(49,860㎡)은 호남고속도로의 ic설치 기준 부적합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주민들의 경작지 및 유희공지로 방치되어 왔으나,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녹색나눔숲 공모사업에 선정(5억)되는 등 2013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1차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생태광장 조성사업은 2014년 완료를 목표로 총사업비 30억원(국비15, 시비15)을 투입하고 2013년 3월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계를 완료후 금년 4월중에 1차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지는 2010년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 주제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에서 「숲으로 손을 내밀다」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 부지로, 남북방향의 호남고속국도 선형녹지와 동서방향의 임방울로, 첨단로 선형녹지가 십자형으로 만나는 녹지네트워크의 결절점 기능을 하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광주시는 31호 교통광장을 생활권 도심 숲으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여 도시와 숲, 사람과 동물이 숲속에서 교감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태광장의 모델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3.01.16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광주시, '탄소중립도시 광주 2050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글로벌 국제환경선도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전략 수립과 특별법(안) 제안

광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교수,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도시 광주 2050 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대비하여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주시가 글로벌 국제환경선도 도시로 부상하기 위하여 아시아 대표 탄소중립 광주 비전을 설정하고 2020년 온실가스 bau 대비 40% 감축, 2030년 5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 등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10대 프로젝트(신재생 에너지의 도시, 녹색산업으로 잘 사는 도시, 생태순환 도시계획, 건축의 도시, 녹색공공 교통의 도시, 빗물과 샛강의 도시, 폐기물 제로 자원순환형의 도시, 생명의 숲과 푸른길의 도시, 저탄소 도시농업의 도시, 글로벌 환경협력의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의 도시)와 52개 구체적인 세부실천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도시 광주 2050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 탄소중립 시범도시 특별법(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광주시는 2011uea광주정상회의 등 국제환경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도시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광주시는 이제 세계적인 탄소중립도시로 부상할 것이며, 광주탄소중립시범도시 특별법 제정 등 광주의 탄소중립 친환경도시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3.01.21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2012년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시범 사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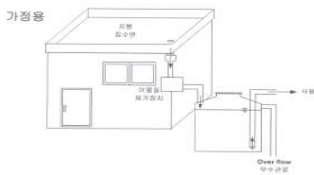
남구 선암동 자치센터 등 3곳 ... 올해 5곳 설치 계획

울산시는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 소규모 빗

물 이용시설 시범사업' 을 지난해 12월 초에 착공, 12월 말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설은 총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남구 선암동 주민자치센터(4㎡), 울주군 삼남면 단독주택(2㎡) 울주군 삼동면 단독주택(2㎡)등 3곳에 설치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지붕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접수한 빗물 이용 희망 시설(13개)에 대해 홍보성, 이용성, 건물주의 관심도 등을 평가하여 3곳을 선정했었다. 이 시설은 지붕에 설치된 집수면을 통해 수집한 빗물을 집수조에 모아 화장실 청소, 텃밭 물주기 등에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이다.

울산시는 올해는 상반기 중 공공기관(자치센터, 유치원)등을 대상으로 수요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5개소 정도를 선정,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설 설치를 원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범위, 비용 등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4년부터는 시설 설치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붕면적 1,000㎡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지난해 1월 12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빗물이용시설 시범사업 모식도

2013.01.09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미래 도시가치를 생각하는 녹화시책’강력 추진

울산시, ‘2013년 녹지·공원·산림사업 추진시책’수립

‘푸른 울산, 생태 도시 울산’ 을 목표로 하는 ‘2013년 녹지·

공원·산림사업 추진 시책’ 이 수립돼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1월 22일 오후 3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시와 구군 관계 공무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녹지·공원·산림사업 시책 보고회’ 를 갖는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녹지공원산림분야 사업은 110개 사업에 총 693억 3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녹지분야 24개 사업(91억 9500만 원), 공원분야 41개 사업(437억 4000만 원), 산림분야 45개 사업(164억 400만 원)이 각각 추진된다. 주요사업을 보면 ‘녹지분야’ 는 녹색의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녹지조성과 녹지네트워크 구축,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 맞는 생태환경도시를 창출하고자 장미식재(31만 본), 도시숲 조성(40,500㎡), 가로수 식재(8개소 11.7km), 복지시설 녹색자금 지원사업(2개소), 학교 숲 조성(5개소) 등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웰빙·휴양·힐링 문화의 확산으로 생활권 내 녹지공원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고 있으므로 울산시는 녹지·공원·산림사업을 각각 분야별로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2013.01.22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울산 맞춤형 생태환경투어 전국에 알린다

24일, ‘울산 생태환경투어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열어

울산시는 1월 24일 오후 4시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울산 생태환경투어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태화강의 성공적인 생태복원과 최근 하수폐기물 등 에너지자원화 시설 등이 완공됨에 따라 울산의 생태시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개발된 ‘울산 맞춤형 생태환경투어 프로그램’ 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 생태환경투어 프로그램은 태화강 탐방, 저탄소 녹색시설 탐방 상하수도 시설 탐방, 생태공원 탐방, 울산녹색길 탐방 등으로 세분화 운영된다.

‘태화강 탐방’은 태화강 전망대, 태화강 대공원, 만화정, 생태문화갤러리, 오산광장, 철새 관찰지, 역새 군락지, 십리대밭교 등의 생태시설을 탐방하는 코스로 짜여진다. ‘저탄소 녹색시설 탐방’은 태화강, 굴화하수처리장, 천상정수장, 성암 에너지 타운(매립장, 조각장), EIP사업체,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상·하수도시설 탐방’은 태화강, 굴화하수처리장, 천상정수사업소, 회야댐 습지공원(여름) 등, ‘생태공원 탐방 프로그램’은 태화강대공원, 울산대공원, 선암호수공원, 대왕암 대공원 등을 코스로 한다. ‘울산녹색길 탐방’은 울산 어울길,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 태화강 100리길 등 18개 녹색길을 코스로 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울산 맞춤형 생태환경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며, 오는 5월 중으로 환경전문가 등을 초청한 팸투어와 6월에 열리는 ‘2013 국제산업생태학회(ISIE)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생태환경투어 팸투어가 실시될 계획이다.

2013.01.24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구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혁신도시 U-City 구축 협약을 체결, 국토해양부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인정 요청 및 승인을 받아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해에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산을 ‘편리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U-City’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사업은 도시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성 강화, 무선인터넷 존(와이파이) 구축으로 U-Life 환경조성, CCTV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u-안전도시 건설 등 크게 3개 분야로 추진되었다. ‘2013년 혁신도시 U-City 구축사업’까지 마무리 되면 울산은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U-City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3.01.25
울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울산, ‘편리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U-City’로 도약

울산시, 지난해 53억 원 투입 3개 분야 중점 추진

환경, 교통, 방범 분야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에 이어 행정 분야에 대한 U-City 서비스 기반구축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U-City는 일반적으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의미한다.

그동안 울산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교통 분야와 굴뚝원격감시체계, 대기오염측정망관리,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등 환경 분야에서 타시도 보다 앞서 U-City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울산 우정혁신도시를 U-City로

경기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녹색성장사업 발굴한다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1월 시·군 공모 추진, 2월 중 사업 심사, 도비 총4억 지원 예정

경기도가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녹색성장 사업을 발굴한 시·군을 선정, 4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주민이 만들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성장사업을 만들기 위해 각 시군별로 지역별 대표 녹색성장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군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도는 1월 중으로 시·군별 공모를 추진, 2월중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 시군 자체부담 50% 이상 매칭을 조건으로 최대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녹색성장사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녹색성장 사업발굴을 통해 녹색성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업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하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월중 사업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3.01.17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 녹색성장팀

전국 생태자연도 일부 개정고시

환경부, 1월 8일자로 전국 생태자연도를 일부 개정고시

이번 개정고시 지역은 지난해에 수정 고시된 전국 생태자연도(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확정 고시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137도엽 가운데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정선 등 22도엽이 금번에 개정고시에 포함 되었다. 금번 개정 고시된 등급별 생태자연도의 경우 1등급은 기존 23.9%에서 23.7%, 3등급은 30.9%에서 28.3%로 낮아지는 대신 2등급은 32.6%에서 34.6%로 조정 되었다.

지난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정고시(안)에 대하여 이의 신청한 춘천, 강릉, 영월, 화천 등의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지역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되었다. 강원도와 시군에서 이의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금년 1월말부터 12월까지 이의 지역의 조류, 포유류, 식물분야 등의 전문가가 현지를 직접방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말 또는 2014년 초에 전국 생태자연도를 갱신할 계획이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 관리지역
기존고시	4,048 (23.9%)	5,523 (32.6%)	5,238 (30.9%)	2,123 (12.6%)
개정고시	4,013 (23.7%)	5,858 (34.6%)	4,792 (28.3%)	2,269 (13.4%)
증·감	감35	증335	감446	증146

강원도는 금년도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이의 신청지역

에 대해 현지조사 시 등급조정 신청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지역 등을 적극 설명하여 강원도와 시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1.11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강원도, 생태계 보고인 민북지역 산림자원 산지관리종합 계획 수립 추진

산지의 현황과 보전·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 조사, 종합계획

강원도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올해 2억원을 들여 5개 시·군 관할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강원도는 지난 50년간 민북지역은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독특한 산지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산림생태계의 보고로 올해 민북산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민북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2013.01.15
강원도청 산림자원과

녹색자원을 통한 강원발전 도약

「환경, 산림, 에너지」가 강원도의 미래입니다!

분 야 별		투자비
환경분야	①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4,725억원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③ 도민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추진	
	④ 청정수질 물 환경 고도화 기반구축	
	⑤ 상수도 경영개선과 안전한 식수공급	
산림분야	⑥ 기후변화 대응한 산림자원 가치제고	2,033억원
	⑦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	
	⑧ 산림휴양시설의 관광자원화	
	⑨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 강화	
에너지 분야	⑩ 동북아 그린 메카 조성 녹색 인프라 확충 (녹색자원의 브랜드화, 에너지 복지 실현)	784억원

강원도 녹색자원국은 2013년도 분야별 시책설명을 통해 「녹색자원을 통한 강원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역점 추진시책으로 「환경분야는 2014 UNCBD 총회 유치, 산림분야는 조림과 숲가꾸기, 에너지 분야는 강원도의 바람 마케팅 전개」 등 10대사업을 선정하고 총7,542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산림·물·신재생에너지 등 전국 제1의 녹색자원을 강원도 신성장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여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지원, 저소득 가구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3.01.28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저탄소녹색성장 산림사업 1,184억 원 투자

충북도,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건전한 녹색휴양 문화 확대 보급

충북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건전한 녹색휴양 문화를 확대 보급하는 충북 명품숲 조성사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2013년도 158종의 산림사업에 1,18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세계적인 화두

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사회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특히 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에 전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림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조성사업에 112억원을 투자하고 임산물 표준출하가공저장 시설을 확대하는데 27억원을 투자하며 도내 임산물생산자 연합회를 운영하는 등 FTA 대비 임업농가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확대한다. 특히 산림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산소득 증대, 산채류 우량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등 2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밀원수림 20ha 등 조림사업 1,914ha, 녹색 숲가꾸기 사업 12,000ha 산림병해충 방제 3,200ha,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태세 구축 등 9종에 337억 원을 투자한다. 청정 그린에너지 보급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택용 펠릿보일러 210대와 공공용 펠릿보일러 29대를 보급하며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여 25만 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계획으로 13종에 130억 원을 투자한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안전 도모를 위해 기상이변과 국지적 산림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방 사업 183억 원, 다목적 임도망 조성 65억 원을 투자하며 대규모 산림훼손지역의 생태복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산림휴양자원 다양화와 고객감동 녹색문화 육성을 위해 산림치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며 진천군, 괴산군에 2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신설하고 있으며 생태숲, 수목원 등 산림자원 전문시설 확충과 속리산 둘레길 조성 등 21종에 200억원을 투자하고, 미동산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 상설 녹색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오는 1월 22일 2013년도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도내 산림관계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발전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군을 비롯한 산림조합,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3.01.11
충북도청 산림녹지과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본격 사업 착수

충북개발공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협의계약체결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협의보상이 지난해 12월 31일 개별 보상금 통지를 시작으로 1월 14일부터 협의계약체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청원군 오송읍 정중리와 봉산리 일원 3,284천㎡(99만 평)의 부지에 2016년까지 9,323억원을 투입,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된 바이오산업 허브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BT와 IT, 첨단업종 관련 공단부지, 연구시설 및 주거단지(11,000세대 주택건설)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 중이다.

오송지역은 신국가 교통망인 KTX 호남선 오송역의 추가 개통과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완료 및 청주·청원 통합 등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도시와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어 부동산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개발공사는 또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충청북도, 청원군,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분양TF를 구성하여 산업·주거용지를 선분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토지리턴제, 무이자할부판매, 매입신청 자격완화 등 각종 조기분양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의 임대용지 선호에 따른 수요를 유인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용지와 분양주택용지를 일괄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보상착수로 그 동안 사업시행 불투명과 보상지연으로 고조되었던 주민불만과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기보상금 수령을 희망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01.14
충북도청 충북개발공사

‘편리하고 스마트한 토지행정’ 다짐

토지행정 운영 지침 설명회...역점시책 설명·토론 등 진행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토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행정 운영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적 재조사 사업과 도로명주소 활용 등 공간정보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정확한 토지 관리를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올해 역점 시책으로 지적재조사로 지적의 정확성 제고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공시지가 결정, 도로명주소 활용 등 공간정보서비스 확대,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투명한 감정평가업자 추천하고,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설명했다. 역점 시책 설명에 이어서는 87건의 토지관리 업무에 대한 지침 설명과 참석자 토론 등이 진행됐다.

충청남도는 토지관리 업무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올해 현안 사업들을 차진 없이 추진해 토지행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스마트한 토지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13.01.28
충남도청 토지관리과

임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공모 선정

3년간 100억원 투자,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

전북도는 농림수산물부가 공모한 '13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임실군이 예비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실군이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도는 '06년부터 7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도내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100억원(국비 30, 지방비 40, 자담 30)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15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해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은 물론, 체험·관광까지 활성화시켜 융·복합산업 기반을 마련, 친환경농업을 한미 FTA 등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 녹색 신성장 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13.01.03
전북도청 친환경유통과

전북 탄소밸리사업 국가예산 안정적 확보로 사업추진 청신호

탄소밸리사업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대비 대폭 증액

새해부터 전북이 글로벌 탄소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탄소밸리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증액되어 통과됨에 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북도도는 2013년도 탄소밸리사업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145억원 대비 100억원(69%) 증액된 2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통과된 탄소밸리사업 국가예산은 또한 2012년 국가예산 112억원 대비 133억원(119%)이 증액됐다. 또한 확보된 예산은 2013년부터 미래시장 수요가 많은 자동차, 조선, 풍력발전기 날개 등에 적용되는 「탄소소재 융복합 부품 기술개발사업」과 탄소소재 시험·분석 및 성형·가공장비 19종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라북도도는 KIST전북분원을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탄소복합소재 원천기술개발 전문연구소로 육성하여 국산화 기술 100개, 중핵기업 50개 육성, 부가가치 7조원 창출로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방침이다.

2013.01.04
전북도청 주택산업과

섬진강 자전거길, 자연체험형 명품길로

전남도, 이달부터 물·숲·쉼터 어우러진 안전·쾌적한 길 본격 조성

전라남도도와 행정안전부는 광양 배알도 해수욕장에서 섬진강댐에 이르는 총 154km 구간의 섬진강 자전거길 공사를 지난 12월 말 착공해 올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섬진강 자전거길은 섬진강·지리산 권역의 아름다운 볼거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야기거리·즐거거리를 담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체험형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기존 섬진강 자전거길은 섬진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일부 자전거길이 조성됐으나 단절구간이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공사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쉼터 등 편의시설을 보강해 자전거길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총 연장 154km 중 46km는 이미 조성됐으며, 이번 공사로 연결되는 구간은 108km다.

전라남도도는 오는 4월 봄꽃이 만개할 무렵이면 광양 배알도에서 목포 하구언까지 245km의 남도 명품 자전거길이 준공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 자전거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종주 "섬진강 자전거 길" 노선도

경상남도,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 조성

2017년까지 92개소 301억 원 투입,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 2,553ha
조성 계획

경남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의령, 함안, 창녕, 합천의 낙동강권 4개군(郡)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단지 92개소를 지정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17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7%인 2,553ha로 확대한 친환경농업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역특화사업 지원, 친환경 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의 5개 사업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301억 원(국비 49억 5천만 원, 도비 72억 4천만 원, 군비 103억 5천만 원, 기타 75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

친환경농업단지에는 225억원을 투입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개소,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9개소, 생태농업단지 조성 61개소 등 지역별 여건과 재배품목에 따라 특화된 92개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10억 원씩 5년 동안 50억 원이 투입되며, 군별로 매년 1개 사업씩 5년 동안 20개 사업을 지원하며, 대상사업은 지역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생물배양센터,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친환경농산물 전용 가공 및 유통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사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체험행사,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구축사업도 병행해서 지원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에는 2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에게

미생물제재, 유기질퇴비 등의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 포함된 자재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벨트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가칭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 조성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 조성 지역인 의령, 함안, 창녕, 합천 4개 군 지역에서 재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04ha이지만, 약 70%가 저농약인증으로 2015년 이후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될 경우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체 경지면적 중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도내 평균인 4.1%에 현저히 모자라는 1.5%(617ha)로 친환경농업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낙동강권 친환경농업벨트와 함께 도내를 지리산권, 남해안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3.01.22
경남도청 농수산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충북도, 에너지절감형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 확대

우선배정 대상에 다문화가정이 새로이 포함

충청북도는 올해 농촌지역 주택 개량사업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우선배정 대상에 다문화가정이 새로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는 변화되고 있는 농촌실정을 반영해 이와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양적인 개량보다는 패시브주택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개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은 물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도에 슬레이트 지붕, 다문화 가족, 저소득 농가 등을 대상으로 총 591동의 농촌주택개량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약 16,700여동을 개량하여 농촌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개량면적은 150㎡ 이하로 5천만 원까지 용자가 가능하고, 선금 또는 중도금으로 50%까지 지급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농촌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 사용, 주변 환경에 적합한 외관소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6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5년 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01.29

충북도청 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

전북도, 도심 생활권 녹지축 구축

도심생활환경 개선과 생태축 연결을 위한

도시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열섬효과를 완화하며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에 조성·관리되는 녹지(숲)를 도시숲이라 한다. 도시숲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자연공간으로써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 속 녹색 숲」을 말한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도심내 녹지축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는데, 2005년부터 도시숲 260ha, 가로수 940km를 신규 조성 하였고, 2001년부터 215개교의 학교숲 조성사업과 산림청 공모로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10개소를 완료하였다. 또한 도시림 조성·관리 10개년 계획('08~'17년)을 수립하여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11년말 현재 17.21㎡로 전국 평균 7.95㎡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단위: ㎡/인) <출처: 산림청 전국도시림 현황통계.2012.12>

2013년 녹지축 구축사업으로는 총 10,028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숲 조성 14.5ha, 가로수 35km를 조성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지 선정 및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학교숲 13개소와 전통마을숲 복원 1개소를 추진 할 계획이다.

2013년 녹지축 구축사업	면적 및 개소수	사업비(백만원)
도 시 숲	14.5ha	6,022
가 로 수	35km	3,246
학 교 숲	13개교	660
마 을 숲	1개소	100
합 계		10,028

앞으로의 도시숲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로써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조성사업을 통한 녹지축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3.01.29

전북도청 산림녹지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100년 만의 지적재조사 (바른땅)사업 본격화

지자체 전담인력 100명 증원 및 한국형 스마트지적 구축 시작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중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지닌 실제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 되는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해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올해, 지자체의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신설(신규100명)되고 사업 예산으로 215억이 확보됨에 따라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토지재배치와 지목현실화 등의 계획으로 주민 수용을 반영한 토지 디자인으로 국토의 이용가 SOC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지적재조사로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으며, 소유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적공부에 구분지상권까지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사업의 추진과정은 100%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 을 도입하여 사업과정에서 국민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측량 기술, 선진화된 지적 제도의 국외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한국형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 활용으로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발생 시키는 등 나라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13.01.14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지원팀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 모색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세미나' 개최

주택정비과는 현재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해 연구된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학계와 연구원, 지자체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을 모색을 목표로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주관하였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먼저 1·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어 지방중소도시의 노후·불량주거지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후반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에 대한 연구내용 발제 및 이에 대한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2단계 사업추진('01~'13년)을 통해 전국 853개 구역에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안 논의결과 3단계 사업('14년~)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불량주거지중심의 사업이 필요하며,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현황은 현재 도시 외곽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지속되면서 구도심 기존 주거지가 노후화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 및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가 밀집하여 상존하고, 산업침체와 노령화로 인해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중소도시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공공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

비정책 방안을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방식의 도입으로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증진 및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정비 등 미래의 도시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3.01.25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간 공동협력사업

본격 착수

국토부, 국방부, 통계청 등 주요 공간정보관리기관들 새해 첫 회동

지난해 11월 국토부, 국방부, 통계청, 기상청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관리기관 협의회」가 정식 발족됨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융합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월 29일(화)에 국토연구원에서 「공간정보 관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참여기관	주요 국가공간정보
통계청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등 센서스 공간통계
국방부	군사지도, 영상지도, 3차원지도, 해도, 공도 등
기상청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지도, 작물별 생태지도 등
국토지리 정보원	기본공간정보(지형, 도로 등), 수치지도, 항공사진 등
국립해양 조사원	해류, 조류, 해안선, 해저지형, 해도, 해수욕장 정보 등

본 협의회에서는 ①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피해 예방 및 시설물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 (시물레이션을 통한 예방책 마련,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 토지용도, 기후, 산업통계정보 등의 특성을 분석을 통한 국토정책 및 기업 경영 등에서의 활용 지원방안, ③ 북극권의 공간정보 구축방안 (국토지리정보원, 극지연구소와 공동), ④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등을 상호 융·복합하여 국가위급상황 등에 효과적 대처, 국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는 방안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다양한 국민생활편의 안이 논의되었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추진협의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공동협력사업 방안으로 보완한 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3.01.28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2013년도 간척지 이용 체계적으로 개편

1.18일부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시행

간척지법은 2012년 1월 17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간척지활용사업의 추진 및 국가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정·공포되었다. 본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농식품부에서 5년에 한 번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간척지 활용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농식

품부 장관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도는 건축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를 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수익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3년 1월 18일부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로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원예·축산 및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01.18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할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확대 추진

농식품부, 총괄계획과 8명 공모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농산어촌마을개발사업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지난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올해는 시군단위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면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총8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읍면정비 80개소, 권역단위종합정비 85개소로 총 165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8개 지구) 황성-강림면, 보은-산외면, 홍성-장곡면, 임실-총관, 봉화-법전면, 경남-합천군, 제주-제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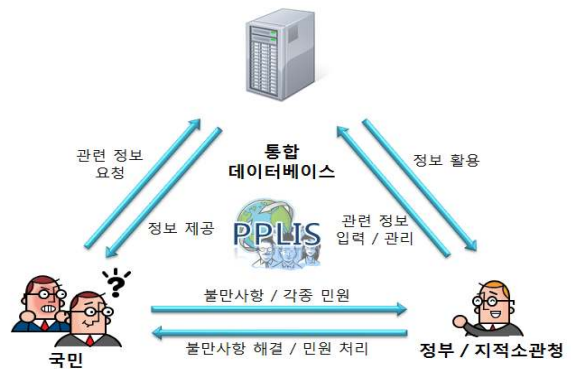
지난해 시범사업결과 기본계획의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총괄계획가의 역할정립 미흡, 활동 매뉴얼 및 체계적인 교육 부재, 위촉시기 지연 등 추진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된 것들을 개선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2013년에도 시범사업을 연장 추진하기로 하였다.

총괄계획가의 자격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며, 이 외에 총괄계획가와 실무계획가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발전

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선정하게 된다.

앞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와 올해 운용사례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총괄계획가 역할모델, 운영지침, 역량을 마련할 계획이며, 2014년도 이후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시군의 자체적 선발·위촉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 운영으로 획일적 마을 개발사업에서 탈피한 특색있는 마을개발 및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총괄계획가가 보완하여 일선행정기관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PPLIS(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모델

2013.01.24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날개 달아

서울시, 종로 귀금속, 성수IT, 마포 디자인 출판지구 등 3개 지구 진흥계획 고시

서울시는 특화산업지구 3곳 (성수 IT지구, 마포디자인·출판지구, 종로 귀금속지구)에 대하여 산업지구에 대한 특성 및 사업 현황과 지구별 특화산업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으

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 및 자금지원 내용을 담고있는 진흥계획을 고시하였다.

1월3일에 고시된 특화산업지구는 「성수 IT지구」, 「마포디자인출판지구」이며, 「성수 IT지구」는 성동구 성수동 준공지역의 일부(539,406㎡)로 현재 2011.5월 서울시가 설립한 성수 IT종합지원센터가 운영중이고, 수제화·인쇄·자동차정비업 등 IT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존산업과 첨단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첨단산업과 전통제조업의 상생모형을 창출할 계획이다.

「마포 디자인출판지구」는 2010년1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대(746,994㎡)로 금년에 서울시와 마포구가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소규모 앵커시설을 확대복합역사로 확장·이전하여 디자인·출판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영컨설팅, 수출마케팅, 디자인개발,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로 귀금속지구」는 종로구 3~4가동 일대(140,855㎡)에 금년 투자비 10억원으로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설립하여, 서울시와 종로구가 귀금속업계의 산업 활성화 측면을 지원하고, 관련업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설운영, 산업발전 전략수립 및 사업 구체화 등의 역할을 맡아 귀금속·보석산업 발전전략 개발, 정보교류, 수출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귀금속 산업의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진흥계획은 서울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공동체 중심의 개발진흥지구 운영으로 기관주도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산업기반조성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2011~2020)



■ 마포 디자인출판지구(2012~2015)



■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2010~2015)

2013.01.03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새로운 유형 쏟아진다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발표... 올해 안에 8만호 중 90% 달성

서울시는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시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투자를 견인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주차장으로 쓰이기 일쑤였던 고가도로 밑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한 1인 가구용 초소형 조립식 주택 및 시립의료시설을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 주택, 일자리지원주택, 노후안심주택과 같은 복지연계형 임대주택 등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여 소외계층을 아우르고 공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공급하는 「임대주택 8만호+ α 계획」을 발표했다.

‘12년까지 임대주택 46,782호 공급을 완료했으며, 올해 추가로 24,982호 공급하여 71,764호 공급 완료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목표를 올해 안에 90%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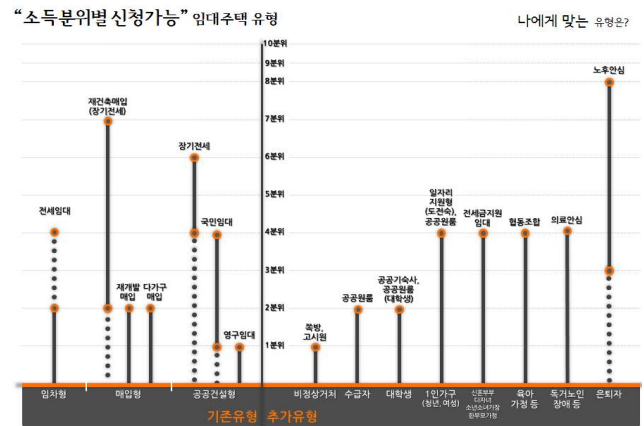
유형	임대주택 다양화 방법과 대상	
지속 확대형	방법	공시유지, 민간주택 및 토지 적극 활용해 지속 확대
	대상	공공원룸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쪽방 리모델링, 고시원 안전시설 개선, 민간토지임차 주택
저비용 고효율형	방법	공공청사가 공공기숙사로, 1천 세대 미래 주거모델도
	대상	공공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모듈러주택 주택,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 민간노후주택 리모델링형
복지 서비스 연계형	방법	의료, 일자리, 노후 특화된 복지서비스와 주거 결합 시도
	대상	의료안심, 일자리 지원, 노후안심 임대주택
공공 민간 협력형	방법	타 지자체, 사회적기업, 주택소유자 등 다양한 민간과 함께
	대상	협동조합형, 대학생공공기숙사, 민간투자사업

아울러 정부 추진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 공급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확대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행복주택 공급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으로 철도부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공급에 있어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 차량기지 및 우수지 상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늘려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차원의 문제로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지구별 수익률 2%를 강요하고 있는 행안
부의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민간 지자체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전체주택재고의 10%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구 분	현행 국고지원	국고지원 확대 건의 사항
국민임대	3,200만원(건설비의 20%)	5,200만원(건설비의 30%)
장기전세	지원없음	국민임대 수준(5,200만원)
원룸매입	지원없음	매입비의 30% 수준 지원
공공기숙사	지원없음	건설비의 30% 수준 지원



■ 소득분위별 신청가능 임대주택 유형

2013.01.16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발표

박원순 시장, 보행 관련 모든 정책·사업의 목표와 방향 제시할 비전 발표

이번 1월21일에 발표한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보도블록 10개명’에 이어 ‘보행친화도시 서울’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철학과 구체적인 사업을 아우르는 비전으로써 보행친화도시조성의 ‘기본서’로 보행관련 모든 시 정책·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 시내 보행환경에 대한 진단을 선행한 결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횡단보도 부재로 인한 무단횡단 위험, 자동차가 점령한 생활도로, 시내 250여 개소의 육교·지하보

도, 들쭉날쭉한 보도폭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행환경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총 10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고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앞으로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을 통해 선진국형 보행도시로의 전환에 기틀을 마련하고, 10가지 단위사업 추진으로 현재 16%인 보행수단 부담율을 2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는 등 '보행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으로 보행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보행친화도시 사업 발굴과 정책자문 및 보행제도, 문화, 환경 개선에 대해 종합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키워드	사업목표	단위사업
쾌적	다양한 형태의 보행전용거리 운영, 보행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보행친화구역 조성	① 보행전용거리를 확대 운영 ② '14년까지 보행친화구역 5개소를 조성
안전	보행자 안전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및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지정, 규정속도 하향 조정	③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 ④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⑤ 생활권 이면도로 차량 제한속도 강화
편리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위해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연장, 교차로에 횡단보도 전면 설치	⑥ 교통약자 보행환경 종합 개선 ⑦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시간 연장 ⑧ 도심 내 모든 교차로에 횡단보도 전면 설치
이야기	보행축제 '서울 걷기대회', 도심권 명소 있는 '도심보행길' 조성해 걷기 문화 확산	⑨ 보행친화도시 서울 걷기대회(가칭) ⑩ 도심보행길(프롬나드)

2013.01.21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부산시,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국 최초 마을별 복합 결핍지수(BIMD) 활용

부산시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단위 소득, 고용, 건강 및 장애, 교육, 주택여건, 사회안전, 생활여건과 같은 7개 영역에 대해 최소 행정 단위별로 결핍의 정도를 조사해 지수로 나타낸 복합결핍지수

(BIMD)를 활용한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적정규모의 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의 커뮤니티 뉴딜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부산복합결핍지수(BIMD, BUSAN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저소득 노후 주거지역 등 낙후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타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결핍지수 조사 결과 상위 20%통이 집단화 되어 있는 1단계 25개 구역(약 44개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커뮤니티 뉴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3단계 구역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커뮤니티 뉴딜 도시재생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정책을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협의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동협의체가 권한을 갖고 개발하며, 집행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므로, 주민과 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결핍지수에 따른 맞춤형 재생사업으로 복지 음영대 해소 및 3단계 약 3,500여 단위사업 성공시 신규 일자리 1만 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1.08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도시재생과

부산시, 마을만들기 컨트롤 타워 본격 가동!

제2기 도시재생 원년을 맞아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

부산시가 2013년을 제2기 도시재생 원년으로 정하고, 5개 분야 22개 세부 마을만들기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기능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3급이상 공무원 7명, 시의원 2명, 분야별 전문가 8명, 시민사회단체 인사 3명으로 구성된 ‘부산시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1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를 통해 ‘다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비전으로 ‘자치, 자활, 자립’의 마을만들기 3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마을만들기 토대마련, 안정화, 확산’을 3단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대 과제, 9개 역점시책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4대 과제	9개 역점시책
마을만들기 기반체제 확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관련 단체 및 법인 육성
마을만들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마을만들기 위원회 운영,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마을만들기 표준시스템 개발	사업지원 표준시스템 개발, 준공시설물 관리·운영시스템 개발, 사업평가시스템 개발
마을만들기 인식 제고	홈페이지 구축, 마을만들기 붐 조성, 아카데미 운영

향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신설,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타 시·도에 앞서 발 빠르게 마을만들기 통합조정기능(컨트롤 타워)을 본격 가동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01.08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기획과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 21억 확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시는, 1972년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내 낙후된 환경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고, 마을 진입로 건설 등 주민 편의 증진활동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국비로 21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 21억원을 개발제한 구역 내 계양구 다남동 산71번지~다남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에 14억원, 서구 백석지구 소3-2호선 일원 도로 개설공사와 남동구 도림3지구 소3-1,7호선 도로개설비용에 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주민지원사업 시행으로 일반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불편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01.1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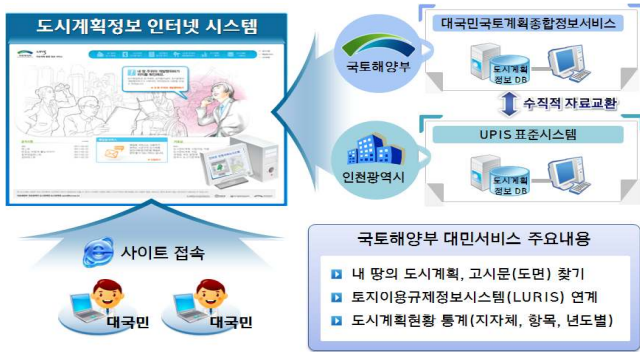
인천시, 도시계획정보 인터넷 검색서비스 실시

국비 2억 원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

인천시는 1937년부터 현재까지 75년간 축적된 고시문, 도면, 조서 등 23만 여건의 도시계획 관련 문서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1월 말부터 국토해양부의 국토계획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이 내 땅의 도시계획, 내 땅 주변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는 도시계획 관련 자료(고시문, 조서, 도면, 이미지

등)를 전산화하여 필지별 각종 도시계획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이로 인해 신속정확한 자료 검색을 통한 One-Stop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며, 도시계획자료의 항구적 보관체계 구축을 통한 자료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계획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도시계획 기초 도면과 기초조사 직접 시행에 따른 용역예산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013.01.1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인발연,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및 관리방안

유형에 따른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 관리와 개선방안 제시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및 관리방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용도지역 및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 따른 실제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과 설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①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룸형의 경우, 주차장 확보 기준을 차등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성남시와 수원시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②단지형 다세대·연립 유형의 경우, 세대수 하한 규정을 신설하여 편의시설, 공용공간 확보 등을 위한 최소 규모 이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③또한 최소한의 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해, 완화된 관리사무소 설치의무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계적 측면에서는 ④도시형 생활주택의 배치·평면·입면·조경 계획 등에 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심의제도와 연계하고, ⑤우수 설계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의 디자인 향상 방안을 제안하였다.

2013.01.04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대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시설 규모 최대 50%까지 확대

올해부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사업계획을 축소해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대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 기준을 최대 50%까지 강화했다.

조례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총 32개 용도 중 공연장, 상점 등 22개 용도를 10%부터 최대 50%까지 강화하고, 교통 혼잡의 영향 정도가 미미한 창고시설 등 10개 용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교통 혼잡의 영향 정도에 따라 공연장(1만 5000㎡→7500㎡), 도매시장(1만 3000㎡→6500㎡), 상점(1만 1000㎡→5500㎡), 의료시설(2만 5000㎡→1만 2500㎡), 대학교(10만㎡→5만㎡)등 5개 용도는 현행 기준보다 50%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6만㎡→3만 6000

m²), 의원(2만5000m²→1만 5000m²), 제2종 근린생활시설(1만 5000m²→9000m²)도 40%를 강화하는 등 이 밖에도 운수시설은 현행보다 36%, 종교시설 33%, 방송통신시설 32%, 운동시설 30%, 숙박시설 27% 등으로 강화하였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연장, 의료시설, 운동시설, 대학교 등의 용도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기준이 서울과 부산시보다 강화되었다.

이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기준 강화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등의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 혼잡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1.14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대전시, 원도심 '희망의 끈 잇기 프로젝트' 추진

‘도심활성화기획단’이전 확정, 회의실도 2곳 추가설치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희망의 끈 잇기 프로젝트 (가칭)’ 추진하였다.

오는 7월 시민대학 등이 옛 충남도청사를 본격 활용하기 전까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실천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첫 번째로 옛 충남도청사에 시장 제2집무실을 설치완료하여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도심활성화기획단이 3월 입주를 목표로 리모델링 중이다. 또한, 기존 대화의실 외에 회의실 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도청사 주변 식당 이용의 날’ 운영하는 등 이외에도 본청 공무원들은 옛 충남도청 인근을 5개 권역(선화, 대흥, 문화, 중앙로역, 중앙시장)으로 구분해 실국별로 분담구역을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식당을 이용할 예정이며, 특히 공무원 개별 친목 모임, 출자출연기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상공회의소, 일반기업인 등에게도 옛 도청사 인근

상권 이용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충청도청 광장을 이용한 축제, 농산물직거래장터 등 전시·부대행사를 개최해 원도심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처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의 상권이 더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원도심 공동화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사람이 모이고, 즐거움과 감동이 넘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3.01.18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대전시, '오정재정비촉진지구' 첫 뉴타운 해제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뉴타운지구가 해제

대전시는 22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사업 지구 가운데 ‘오정재정비촉진지구(이하 오정지구)’ 지정 해제를 심의해 원안이 가결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덕구 오정동 일원 총 187만 2000m²로 모두 11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오정지구에 있던 포함된 오정동 일원 7100여 가구는 그동안 규제됐던 건물 신축증은 물론 토지거래 등 그동안 묶여 있었던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오정지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덕구청 등이 있는 주거와 유통 및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



■ 대전오정재정비촉진지구

이 지구는 뉴타운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녹지 및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시의 기능회복과 침체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9년 6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6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대덕구는 오정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오정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공원 및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장 및 설치 시급하고 세종~대전역 BRT노선 계획과 도시철도 오정역 설치 등 개발 잠재력이 높아 촉진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임을 설명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덕구청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해제에 동의한 내용과 같이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촉진(정비)구역 해제 동의에 따라 8개 구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이상 동의가 불가능하게 됐고, 나머지 3개 구역만으로는 당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번에 지구지정을 해제하게 됐다.

대전시는 이번 오정지구 해제된 11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해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엔 일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의 제안에 의한 소규모 지역공동체 정비방식(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구 신흥, 중구 선화·용두, 서구 도마변동, 유성구 유성시장, 대덕구 신탄진지구 등 5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촉진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사업의 추진의지가 강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간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해 촉진사업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선도 사업에 1162억 원의 설치비를 투자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중 국비 400억 원을 포함한 8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2013.01.23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광주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동력 확보

지방하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포함 170억 예산 확보

광주광역시시는 지금까지 획일적인 제방개수 위주의 하천사업에서 탈피하여 치수·이수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서·문화·환경·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물론,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를 필두로 하여 광주천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하천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3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70억원(국비120)의 예산을 확보 하였다.

풍영정천, 서창천에 스토리텔링을 도입하여 하천의 역사와 유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출향인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하며, 하천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수질개선을 융합하는 물 순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하천복개로 폐천되었다가 복개가 철거된 서방천을 하천으로 재지정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석곡천과 용산천, 장등천을 자연 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고, 송산천에 대하여도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하천조성 및 하천 생태계 복원과 친수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013.01.16

광주광역시 생태하천추진과

울산시, 귀어가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창업자금 세대당 2억 원, 주택구입 4000만 원 한도 내 지원

울산에서 추진 중인 귀어가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어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책과 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 인력들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2008년 1월1일부터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회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면 신청 가능하다.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에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이며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어촌관광, 체험어장, 농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되며, 주택마련 자금은 어가(전용면적 150㎡)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어업창업자금이 세대당 2억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000만 원 한도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며, 지원 신청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울산시 향만수산물 접수하면 된다.

2013.01.18
울산광역시 향만수산물과

울산시, 동해안 자전거길 본격 조성

신명~정자~주전~대왕암공원~장생포~간절곶까지 92km구간

울산시는 강원도 고성(통일전망대)에서부터 부산 을숙도까지 총 연장 720km를 잇는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중 울산 구간인 92km에 대해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지역 동해안 자전거길은 정자, 주전 몽돌해수욕장에서 대왕암공원~장생포~진해해수욕장~간절곶을 연결하며 주로 자동차

통행이 적은 지방도로나 마을안길 등 해안도로를 따라 조성되며 연초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오는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우선은 올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시 부담금 3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비 60억 원으로 우선 단절된 해안도로를 연결하고,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기존도로는 노면 표시를 설치해서 자전거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안내표지판과 휴식공간을 중간마다 설치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울산시를 찾는 자전거탐방객들이 주변경관이 수려한 동해안 해변을 따라 주요관광지 방문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도로과는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이 완성되면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울산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과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01.29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빨라진다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수시 개최로 행정절차 기간 단축

2008년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산업단지 지정 등 단지개발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기존의 분기별 1회 개최에서 2013년부터는 수시로 개최해 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체계 구축, 산지전용 등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로 특례법은 기존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동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미 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1.13
경기도청 기업정책과 산업입지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 사업 탄력

도로포장 등 15개 시군 22개소 사업 국비 123억 원 확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동안 토지이용규제, 재산권의 제한적 행사 등으로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을 도모 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경기도에는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3%가 집중되어있고, 거주민 역시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절반인 6,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국비 123억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사업인 마을공동 구판장, 도로 포장, 하천정비, 공원조성 등 15개 시군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될 대표적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고양 원흥동 도로 확포장공사, 하남시 개미촌천 정비사업, 수원 상하광 교동 마을공동 구판장 및 창고 설치 사업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 총 사업비(487억 원) 가운데 전국 14개시도 중 가장 많은 123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그동안 도의 현실을 감안해 국비 확대를 요구한 경기도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3.01.15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녹지관리팀

경기도, 독거노인 함께 살 공동생활주택 설치한다

경기도, 카네이션 하우스 시범사업 공모 접수

최근 소득의 양극화와 고령화로 인한 생활곤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2013년 현재 전체 노인 112만 명 가운데 22%는 경기도내 독거노인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공동생활시설인 ‘카네이션 하우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도내 4곳에 짓게될 카네이션 하우스는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기타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숙식이 가능한 생활시설과 공동작업이 가능한 작업장 등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4곳은 도시, 농촌 구분없이 사업 제안을 통한 공모로 선정되며 각 시설별로 5천만 원의 시설 리모델링비가 지원되며, 취사도구 및 침구 등 생활용품도 제공된다. 시설 운영은 이장이나 통장, 부녀회장 등 마을 대표자를 지정해 관리 하게 되며 독거노인들은 생활근거지는 기존 개인거주 주택에 두고 취사와 숙박, 일자리 작업만 공동거주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향후 발생하게 될 시설 개보수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집수리 사업단’ 등 자원봉사 사업을 연계해 진행하게 된다.

‘카네이션 하우스’ 시범사업을 통해 여름이나 겨울철 독거노인의 안전사고나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 과 외로움으로 노인자살, 우울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다면, 향후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013.01.15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경기도 내 반환공여지 개발지원 확대 총력

올해 반환공여지 토지매입비와 주변지역 도로·공원·하천 조성사업에
1,352억 원 투자

경기도는 도내 반환공여지내 도로·공원·하천을 제외한 기반시설에 대해 미흡했던 정부의 토지매입비 지원과 국비지원 형평성과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국비가 미반영 되어있던 주변지역 도로 사업 및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도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사업에 국비 727억원, 지방비 624억원 등 총 1,352억원을 지원하고 토지매입사업 2건 64억원, 주변지역 도로사업 21건 20.73km 개통에 1,28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반환기지 중 캠프 에세이온에는 도로, 을지대학병원, 교육청을, 캠프 카일에는 행정타운을, 캠프 님블에는 침례대학을, 캠프 하우스에는 도시개발, 공원이 착공되며, 캠프 시어즈에는 행정타운이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반환공여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과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반환기지내 기반시설 공사비와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비 지원 등에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통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여구역특별법』과 『조세감면특별법』의 법률개정(안)이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국회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도는 취득세·등록세 감면법 개정발의와 토지 가격 인하요인 발굴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수송인프라 부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환공여지 사업의 적극적인 개발지원으로 안보로 희생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을 기대해 본다.

2013.01.15

경기도청 균형발전과 공여구역팀

경기도 구도심, 융복합 도시마을로 재생된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우선 10개소 선정 계획수립비 지원 추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인 뉴타운의 문제점과 부동산 침체에 따른 구도심 슬럼화를 극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재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재생 사업을 일자리 제공과 환경정비가 어우러진 ‘융복합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현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10개 지역 내외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마을에는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획 수립 용역, 주민의견 수렴 등에 들어가는 약 1억 원이 지원되고, 마을 주민은 이 비용을 활용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로, 주차장, 방법시설, 마을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우선 지역사회에 봉사를 희망하는 기업 등 지역 단체의 참여를 통해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보조 지원이 불가능한 개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게 되며, 아울러 새롭게 재생되는 마을에는 일자리가 공존하는 ‘융복합 도시마을’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협약 등을 통해 해당 마을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는 참여하는 기업과 지역단체에 홍보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민·공공·지역 단체가 함께 만드는 융복합 도시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 28일까지 공모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평가된 사업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주민참여 등 준비가 될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평가 후 지원할 계획이다.

2013.01.23

경기도청 융복합정책과 맞춤형비팀

전남도, 휴양전원마을·은퇴도시 조성 가속 페달

23일 진도 명량지구·산해뜰지구·무안 월선 은퇴도시 투자협약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민의 귀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휴양전원마을 및 은퇴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3일 오후 도청에서 도지사과 군수, 입주자 대표와 입주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월선 은퇴도시와 진도 명량지구 산해뜰 지구에 휴양전원마을 455세대를 건립키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날 협약은 전남도와 진도군이 사전에 입주 예정자를 모집한 후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체결한 것으로 기존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인 분양률 저조를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진도군은 명량지구와 산해뜰지구에 대해 군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 조성을 실시해 택지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인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명량지구는 배산임수형의 남향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접하고 있는 택지로 군내면 일원 6만 9천106㎡에 94억 원을 투자해 한옥형 주택 53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산해뜰지구는 진도읍 산월리 일원 11만 5천84㎡에 219억 원을 투자해 전원주택 152세대가 건립되며, 가산토건은 무안 청계 월선리 일원 48만 1천200㎡ 부지에 505억 원을 투자해 250세대 규모의 한옥 및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생활편의시설로 힐링센터와 건강산책로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휴양전원마을과 행복마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3.01.23

전남도청 투자개발과

경북도, 농촌마을 개발사업 시동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사계절 영농기반 조성 등에 2천290억원 투입

경상북도는 올 한 해 2천29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공간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농어촌활성화를 위해 도내 농촌지역을 복합생활문화공간인 '녹색웰빙마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정주서비스 기능충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1천507억원을 투자해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안한 쉼터로써의 마을기능을 유지하며,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창조지역사업 등 4개 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에게는 생산 공간, 도시민에게는 체험·휴식·관광 공간이 되도록 마을을 재구성한다.

아울러 사계절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FTA 등 시장개방시대 농업경쟁력의 밑바탕이 될 선진농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15개 사업에 548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함께 재해 걱정 없는 배수시설 관리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시스템을 유지 및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95억원을 투입, 배수시스템 개선에 힘 쓸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적 삶의 양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촌개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3.01.08

경북도청 농촌개발과

경북도, 녹색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물류수송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기여

경상북도는 그동안 국토 균형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경북 동해안을 비롯해 낙후된 북부내륙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녹색철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철도망 구축사업은 1조1천660억원으로 경부고속철도 등 8개 노선에 대해 대대적인 녹색철도망을 구축하게 되며, 2014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서울~

대구간 경부고속철도 1단계사업 준공에 이어 대구~부산간(도심구간)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1조7천531억원이 투자됐고, 올해는 4천290억원을 투자해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안의 동해중·남부선 철도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에서 출발해 KTX신경주 역사를 거쳐, 포항에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철도건설사업은 연장76.5km에 2조3천43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난해까지 4천94억원을 투입되었고, 올해는 3천400억원을 투자해 용지보상과 노반공사를 추진한다. 2018년 본 노선이 개통되면 포항의 철강단지와 울산의 조선, 자동차산업과 직결되는 산업철도망 구축으로 침체된 동해안 경제권이 한층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 녹색철도망 구축사업 위치도

경상북도는 미래 녹색교통으로 각광 받고 있는 철도망의 대대적인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청정지역 동해안과 낙후된 북부 내륙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망 구축사업이 물류수송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경제·사회·문화·관광을 이어줘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01.28

경북도청 건설도시방재국

신경주 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박차

문화관광 및 첨단과학이 복합된 경주지역 부도심 육성

문화관광 및 첨단과학이 복합된 경주지역 부도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977번지 일원에 4천2백억원을 투입, 137만2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승인이 나면 2013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거쳐 2017년에 역세권개발사업, 2019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 개발계획수립 확정(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의 상징성, 성장성을 고려해 대중교통(KTX)중심의 친환경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총면적 137만2천㎡ 부지중에서 주거용지 27만㎡, 상업용지 10만5천㎡, 산업·유통시설용지 17만8천㎡, 관광시설용지 3만8천㎡, 기반시설용지 65만4천㎡, 기타시설용지 12만7천㎡ 등으로 계획되어있다.

인구수용 및 주택계획은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6천897세대, 1만7천659명 인구수용을 위해 단독주택 123세대, 공동주택 및 실버타운 6천774세대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60㎡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은 전체 계획인구의 40%이상을 공급하고, 사회적 혼합을 위해 공급주택을 규모별로 혼합해 건립할 예정이다.

교통계획은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내남~외동)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진·출입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방도 904호선의 선형을 고천변으로 변경해 왕복4차로로 확장한다. 또 경전철, 모노레일 등의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책을 수립해 반영할 계획이며, 신경주역~고천~대천~형산강~경주도심을 잇는 자전거 도로 연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원·녹지계획은 전체대상지의 19.2%를 차지하며, 사업지구

내 하천, 공개공지, 광장 포함시 실제 활용 가능한 공원·녹지율은 24.3% 정도로 쾌적한 도시를 지향해 주민들은 친환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으로 경주시가 지향하는 문화·과학도시의 비전을 반영한 현대문화, 복합관광 및 첨단과학이 복합된 역세권 부도심의 역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1.30
경북도청 건설도시방재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속화

경상북도, 21C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발전모델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21C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공사 시공 방법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평가로 에스티엑스건설(주)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돼 현재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CM) 착수와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토지보상과 함께 착공해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주변인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 24억5천㎡의 부지에 총사업비 792억원을 투입된다.

한마음 공원, 역사이해 공원, 창의연수 공원, 글로벌 공원 등에 연면적 28천㎡의 공간을 조성, 새마을운동을 한자리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새마을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마음 공원은 3억5천㎡의 부지에 각종 행사 기능과 박람회 기능, 휴식·산책을 가능토록 구상해 원형의 새마을 광장을 중심으로 조각공원, 분수대 설치, 조각물 등을 전시하고 지하에는 7천㎡의 대형주차장을 조성해 관람객 편의를 도모한다.

역사이해 공원은 7억8천㎡ 면적에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이념관과 태동단계부터 현재 글로벌화 단계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관, 분야별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주제관을 설치한다. 아울러 역대 새마을유공자를 추모하는 명예의 전당과 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되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재현촌을 설치한다.

창의 연수공원은 11억3천㎡의 부지에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교육 공간조성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자료관과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리더십 훈련장, 구상의 숲 등이 위치하게 된다.

글로벌 공원은 1억7천㎡의 부지에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미래 가치화하고 세계화하는 공간으로 해외 활동사업을 패러다임별로 소개하고 해외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업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계획(안)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새마을 운동의 전 세계 보급을 위한 글로벌 성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명품 교육테마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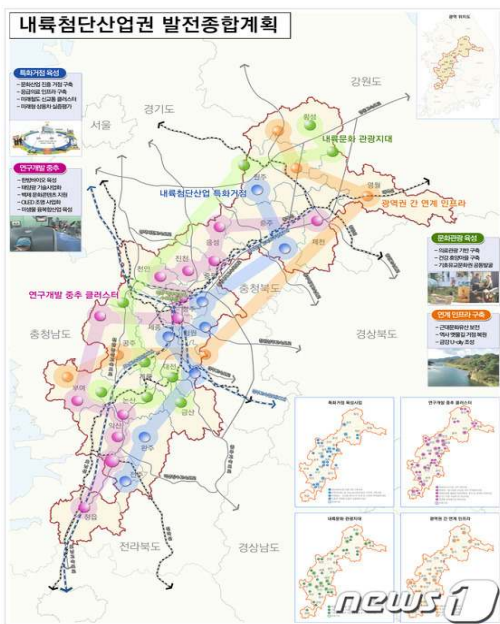
2013.01.31
경북도청 건설도시방재국

충청내륙 초광역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충북도 주관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

충청북도 주관 중부내륙권의 우수한 첨단산업 인프라를 미래신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한 6개시도(충북,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세종)간 연계·협력 사업을 담은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8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관련 시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은 정부의 3차원적(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2개 이상의 광역권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내륙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산업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계획은 2020년까지 중부내륙권 6개 시도가 내륙첨단산업권을 과학기술·신성장산업의 거점과 관광지대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4대전략 15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조 8,99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충북도는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시 시도 간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조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권 6개 시도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많이 포함된 만큼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에서도 본 계획안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안을 확정 한 후 각 시·도지사로 구성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공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정부(국토해양부)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3.01.04

충북도청·국토해양부 충북개발연구원·지역발전위원회

제주2013, 공공디자인 무대를 펼친다

공공디자인 사업 활성화 추진

제주시는 지난해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가파도 경관개선 사업', 'IBM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선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기반을 마련하고, 2013년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매력있는 디자인 제주 구현'을 위하여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원도심 보행로 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주의 가치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관광산업, 투자유치, 수출 등 제주산업 전 분야 걸쳐 제주경제 도약에 기여키 위한 글로벌 제주 브랜드 체계 구축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은 브랜드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노하우와 인지도를 가진 IBM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며, 주요내용으로 제주브랜드의 이미지 조사, 브랜드 체계 구축, 글로벌 통합마케팅을 위한 전략 및 실행사업을 개발하게 된다.

제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보듬고 변화와 창조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그려낼 보행자를 배려하는 원도심(도남오거리 및 목

관아 주변) 보행로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500백만 원을 투입하여 안내사인, 가로시설물, 오픈스페이스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3년에는 지난해 수립한 계획 등의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공디자인 사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2013.01.04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단

기 선진화 사업' 등이 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올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단계까지 도민의 입장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집행할 방침으로 도민과 도정이 동반자로서 함께 역「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01.04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단/도시계획과/건설과/교통항공과

제주도, 최우선 과제 '도시경쟁력 제고'

도시디자인본부 1,826억원 투입 32개 사업계획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1826억원을 투입하여 32개 항목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매력 있는 '디자인 제주'를 육성하기 위해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주의 가치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제주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금산 수원지 생태복원사업, 김만덕 기념관과 객주터 등 16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상호 시설별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의 행정력 강화, 제주지역의 특성과 자연경관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개발행위 허가기준' 마련, 작년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 이전에 이은 국립기상연구소 이전과 더불어 2014년까지 9개 공공기관 이전완료계획사업, 도시 지역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물·토지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힐링팀' 구성, 친환경 가설올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시행, 신혼부부의 과도한 결혼비용과 주거비 등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한 출산률 제고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한 '위치 찾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2월호 (통권1호)

발 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일 : 2013.05.31

발행인 : 제해성

ISSN : 2288-274X

편 집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담당자) 031-478-9845, kslee@auri.re.kr (이경신)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Acrotower Office,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